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ep.2

위기의 시대 담대한 전환

기후정치와 시민의회

2024.11.22. 금요일 오전 10시-12시, 노회찬시민센터 다들려강의실

사회 | 박창규(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

발표

- 기후위기 시대, 정치의 재구성
 -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
- 기후시민의회의 현황과 과제
 -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토론

- 장석준 (전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본부 대외협력부장)
- 안병일 (보령시에너지센터장)

기획 및 진행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발표문

기후위기와 정치의 재구성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

○ 배경: 기후위기 시대 다른 정치의 요청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여타의 사회정치적 위기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자연 현상이자 사회 현상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기성의 법제도와 경제적 관행뿐 아니라 제도화된 학문적 접근과 인식론으로도 충분한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를 ‘국가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그 영토와 국민을 위하여 실행하는 여러 가지 일 또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 유지, 조정, 행사하기 위해 전개하는 사회적 제반 활동’이라 정의하는 것 역시 기후위기 앞에서 너무 안일하거나 완전히 허구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의 정치는 국제 기후체제 수준에서나 일국적 정치 차원에서나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기후정치 정의의 수준

기후정치는 세 가지 수준 또는 방식으로 정의 가능하다. 첫째, 새로운 물리적 및 경제사회적 현상이자 의제로서 기후위기를 다루는 (제도/비제도) 정치를 의미한다. 이는 기성의 정치가 기후위기는 새롭고 특이한 현상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거나 다루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음을 강조하는 정의다. 여기서 기후정치는 기후위기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많이 수용하고 정치 의제와 예산 등에서 중심적인 것으로 삼는 정치로 이해된다.

둘째, 기후위기가 기존 정치의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현상과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기후위기가 단지 제도 정치 내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관련 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한다고 해결되는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광범하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부된 것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기후정치는 근대적 대의제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 사회계약 같은 핵심적 정치 원리 원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기후위기를 해결하거나 적응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정치 소통과 정치 제도의 도입과 실험이 강조된다.

셋째, 기후위기 속에서 정치 자체의 의미와 방식의 재구성을 의미하는 보다 넓은 정의다. 이는 근대성이 부과한 인식론인 자연과 인간 사이의 이분법을 허물고 비인간 주체까지 포함하는 다중적

행위자를 포괄하는 행위 준칙과 세계관을 요청하는 접근이다.

물론 이 세 가지의 정의가 배타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수준을 나누어 접근하는 것은 기후위기가 기존 정치를 재구성하게 만드는 필요성을 제기할뿐더러 이미 여러 가지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수준의 정의에 고착되면 이러한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정치 동학을 다룰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당위로서가 아니라 현실 제도와 운동의 사례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 기성 정치의 한계에 대한 진단

기후위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기성 정치의 한계는 화석 자본주의가 규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티머시 미첼 등), 경제성장의 정언명령이 지배하는 인식론의 한계(더글러스 러미스, 아미타브 고시 등),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전 세계적 통치권력의 불가능성(웨인라이트 & 만) 등으로 진단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성 정치의 관성을 타개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제안들도 체계적이지는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나오미 클라인의 ‘블로카디아’, 안드레아스 말름의 ‘생태적 레닌주의’, 탈성장론의 탈성장 코뮌주의와 에릭 올린 라이트의 변혁론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상상력의 해방과 변혁 정치를 위한 모색은 유의미한 참조를 제공한다.

<표> 에릭 올린 라이트를 응용한 탈성장을 위한 전략적 캔버스 (Barlow et al, 2022)

변혁의 모드	전략적 논리	자본주의의 해악 줄이기	자본주의의 구조를 넘어서기
틈새적 변혁: 자본주의 사회의 주변부, 일반적으로 권력이 지배하는 공간 외부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임파워먼트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항하기 예. 기후정의 시위	탈출하기 / 대안의 건설 예. 광범위한 정치적 개입 없이 생태마을 운영 / 타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공생적 변혁: 궁극적으로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적 형태를 변화시키고 현 체제 내에서 대중적 사회적 권력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길들이기 예. 국가 CO2 배출량에 대한 절대 상한선을 설정하는 정책	해체하기 예. 장기적으로 대기업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정책	
단절적 변혁: 기존 제도 및 사회 구조와의 첨예한 대결 또는 단절을 추구한다(단기적이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수행될 수 있음).	멈추기 예. 불복종 행동	타격하기 예. 노동자의 공장 점거	

○ 다른 ‘현실 정치’의 모색

기후위기 대응에서 현실 정치와 국가는 절대로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차원이다. 하지만 기성의 정치와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과 기성의 구조와 방식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히 유효하거나 적절하다는 것은 다르다. 기후위기 그 자체가 기성의 정치 구조가 만들어내거나 심화시킨 현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의 다른 정치는 무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라이트의 도식을 빌자면 기성 정치의 공생적이고 틈새적인 영역과 방식으로 출현하고 발전할 수도 있다.

첫째, 기성 제도 정치의 변화의 사례로 미국 선라이즈 운동과 독일의 노사정 합의가 있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는 의회 정치와 제도 정치의 조건과 자원이 기후위기를 진지한 의제로 만들고 사회 전체에 유의미한 시그널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효과적인 사회운동의 압력이 존재하거나 제도 정치의 대변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때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둘째, 제도 외 정치의 모색으로 기후 시민의회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국과 프랑스 모두 2020년경 기후 시민의회가 실험되었는데, 모두 일정한 성과와 한계를 보였다. 기후 시민회의는 기존 대의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대체하고 긴장을 불러 일으키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식을 확장할 ‘이중 권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갖는다.

셋째, 자유주의 시장이 정치를 복속시키는 구조를 넘어서서 계획과 참여 민주주의를 재소환하는 수준의 사례다. 특히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 제안(벤티스 & 펜더그라스)은 이념적 생태 사회주의나 규범적 탈성장 아이디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치 의제로 상승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적 계획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참여 민주주의의 재소환을 요구하는 주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성장주의와 기술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기후 의제의 내용과 작동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관의 급진적 전환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수준의 예산과 자원 배분의 원칙과 방식의 재편에 대한 요구 속에서 논의와 운동을 추동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며, 그린뉴딜의 재론과 급진화는 그 유력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넷째, 정치의 주체와 의제의 확장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등의 기후 소송에서부터 자연법 도입 논의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르주아적 소유권 중심의 근대 법체계와 정치 제도가 갖는 한계로까지 비판을 확장함으로써 기후정치의 주체와 의제는 엄청나게 넓어지게 된다.

다섯째, 기후정치와 운동에 이제까지 주목되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과 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샹탈 무페는 정동의 정치와 좌파 포퓰리즘이 가장 강력하면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는 공통의 정치 현상으로 팬데믹과 더불어 전 인류의 비상사태로서의 기후위기에 주목한다. 무페는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은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정동, 그리고 이러한 정동이 새겨지는 동일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독일 윤리위원회는 “정치와 사회가 당면한 갈등을 규범의

문제로 이해하는 감각을 키울 것”을 권고한다. 한국 사회에 여전히 팽배한 ‘기후침묵’과 냉소를 극복하는 데 있어 녹색 정동 개념은 중요한 정치와 운동의 자원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기후위기 시대 다른 정치의 모색 사례

기후정치 유형	사례	비고
제도정치의 변화	미국 선라이즈 운동 독일 노사정 에너지전환 합의	대통령 중심제, 양당제의 배경과 사회주의 리부팅의 동력 내각제와 협의 정치의 전통
제도 외 정치 모색	영국, 프랑스의 기후 시민의회	조건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성과와 한계, 이중권력 논의로 발전 잠재력
계획과 참여 민주주의의 재소환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 제안 (성장 없는) 그린뉴딜	자유주의 시장이 정치를 복속시키는 구조를 넘어서기. 계획 경제와 탈성장의 조합
정치 주체와 의제의 확장	독일 등 기후소송 자연법 도입 논의	신유물론, 포스트휴먼 이론으로 확장
기후정치의 새로운 감각	녹색 정동, 생태적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급진화와 생태적 전환 생태 파시즘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한국의 기후정치 지형과 동향

전반적으로 한국 국민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근시안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후변화는 심각하지만, 해결은 나중에’라는 태도가 강한 것이다. 한국 국민 10명 중 8~9명은 기후변화를 심각하다고 느끼지만, 당장은 경제 성장이나 실업 등에 집중하고 기후변화는 장기과제로 두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후 지체’와 ‘미래할인’의 경향이 큰 것이다.

그런 한국에서도 기후위기는 시나브로 제도 정치와 언론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지난 총선 직전에 한국 유권자의 1/3 정도는 기후위기를 대선에서의 정치적 선택에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용의가 있는 ‘기후유권자’라는 분석은 희망적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서만 특별히 반응하거나 선거에서의 선택을 결정하는 동인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이 조사 결과가 협의의 선거 정치라는 의미에서의 제도적 기후 정치, 최소한 기후유권자 정치와 운동에 대한 기대를 높이지만, 그러나 이런 의사와 현실 선거 정치의 선택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22대 총선에서 기후시민과 기후유권자가 호명되고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 선거의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기후위기가 심도있게 토론되지도 못했고 주요 정당의 정책과 공약으로 충분히 반영되지도 못했다. 선거 결과 역시 한국의 여론 지형과 제도 정치의 관성을 넘지 못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정의당과 녹색당이 연합 정당으로 선거에 나선 녹색정의당은 3%라는 의회 진출 최저선을 달성하지 못하고(2.14% 득표) 의회 진입에 실패한 것이 가장 상징적인 결과다. 물론 녹색정의당의 성적은 기후정치라는 잣대로 평가하기엔 너무 복잡한 배경 설명이 필요하다. 선거 직전 저조했던 정의당의 지지율과 지지층 이완 현상 속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강력한 양강 구도와 상호 증오 정치의 분위기가 녹색정의당의 입지를 더욱 좁혔다. 하지만 녹색정의당이 정책 공약 외의 담론과 활동에서 기후정치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 내용적으로는 더욱 아프게 평가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물론 기후 대중운동의 성장과 기후 유권자 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과 언론이 보이는 적극적인 반응은 유의미한 변화다. 그럼에도, 22대 총선에서 보였듯이, 두 거대정당 사이의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정치 속에서 기후위기와 같이 우리의 긴 미래를 규정할 중요한 문제들은 다시금 뒤로 밀려났다. 선거 제도 개혁으로 ‘정치 다양성’을 키운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후 정치 또는 기후 민주주의의에는 턱없이 미달할 것이 분명하다.

○ 한국의 정치체제가 가로막는 기후정치

22대 총선에서 다시 확인된 한국 기후정치의 현실을 넘어서려면 우리의 논의는 한국의 정치 제도와 관행 자체가 ‘기후약당’이고 기후 지체의 주범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와 그것이 낳는 단기적 시야의 승자(양당) 독식 정치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최악 중의 최악의 제도와 관행이다.

이유는 첫째, 선출직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자기 임기 이후의 일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둘째, 지금과 같은 국회의 구성 자체가 기후위기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장 저렴하게 쓰고 편익을 누리는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선출되는 의원 숫자가 70%가 넘고 기후위기의 피해를 떠안는 농어촌은 인구 감소로 인해 거대 선거구가 되고 있는 탓에 기후 기득권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셋째, 해방 이후 줄곧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성장주의 아래에서 정치인들은 예외가 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무분별한 성장에 앞장서야만 하는 운명이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갖는 한계에 관한 논의는 현실성을 이유로 회피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어떠한 정치체제든 장단점이 있고, 의원내각제(정당책임제)가 기후위기 해결을 보장해준다고 말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핵심은 지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리부팅되고 정작 중요한 의제와 쟁점들은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정치체제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성의 국가 제도정치 바깥의 정치만을 기후정치의 활로로 삼을 경우 현실의 선거 정치와 대중적 정치 담론에 대해서는 개입력을 잃게 된다. 반면에 현행 대통령제의 대폭 변경 또는 교체라는 대안의 선택지를 가질 때 기후정치는 이러한 중요한 개입 지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성장주의가 가로막는 기후정치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여론의 소극적인 태도는 한국에서 기업이 갖는 위상과도 관련된다. 역대 정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은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진행되었다. 경제 성장을 희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주문은 타이타닉호를 잠시 멈추거나 방향을 급선회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인식과 고정 관념이 정부뿐 아니라 시민 사이에서도 강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9년에 튼베리로 상징되는 세계적 기후행동의 물결을 거치고 국내외적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포하고 한국형 그린뉴딜,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하지만 기후침묵의 뒤를 이은 것은 일종의 허구적 기후정치에 가깝다. 성장을 해치지 않는 기후정치라는 기만의 밑바탕에 있는 게 한국에 더욱 특수하게 자리잡은 성장주의다.

결국 성장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 발전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치인과 시민들에게까지 뿌리내린 성장 강박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후정치는 원칙과 이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거꾸로 말하자면, 한국에서 기후위기를 대면하고 해결하는 정치는 성장주의와 맞서 싸우고 다른 미래를 상상하게 해주는 이론, 정치 제도, 그리고 녹색 정동의 정치여야 할 것이다.

○ 정치와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자원을 배분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방식의 정치의 변화 요구한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치는 제도 정치와 사회운동 및 시민의 삶을 관통하는 정치의 상을 제시해야 한다. ‘기후 베헤모스’를 순치하고 ‘기후 X’를 활성화할 구체적인 도구와 방안들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정치의 주체의 확장(미래세대, 지역, 비인간 자연)과 의제의 적극적 확장(지구행성적 한계를 고려하는 도넛경제학의 정책 규범화)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주체와 의제의 확장은 자연스럽게 기성 제도 정치와 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것들 바깥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성의

제도와 관행 그리고 주체들이 중요한 마중물과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즉 기후위기 시대의 ‘좋은 정치’와 ‘다른 정치’ 모두 필요하다. 좋은 정치는 분명히 유효하고 필요한 대안이지만 사람들의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느낌과 상식을 그렇게 모아내는 정치다. 그 속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다른 정치도 발견되고 연결될 수 있다.

기후정치는 현재의 정치 및 운동 지형과 전망에 근거해서 개입 지점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도를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 바탕이 되는 열개로서 “기탈존내(기후위기, 탈성장, 존재 다양성, 내각제 개헌)”라는 키워드를 제안한다. 우리에게 기후정치를 실현할 정당이 요구된다면 바로 이러한 기치를 내 건 정당일 것이다.

특히 내각제 개헌은 이러한 인식과 지향을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바꾸면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지렛대다. ‘기탈존내’의 사회는 거리에서의 몇 번의 외침이나 팔짱 낀 평론만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기성의 정치 제도와 관행을 허물고 바꾸기 위한 대결과 침입으로 돌파구를 열고 무게중심을 바꾸어야 가능하다. 우리는 기성의 제도를 묵인해서도 안 되고 기권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 기후위기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성장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존재 방식을 획일화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이 중요한 출발이자 논의의 물꼬를 트는 매개일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기후위기 앞에서 대의제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중권력을 상시화하는 프로젝트이자 의제로서 기후 시민의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기후 시민의회의 요구는 기성 제도 정치와 민주당에 의탁해 온 시민사회 운동 모두에게 회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는 기획이다.

○ 기후정치와 기후운동의 전략과 과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시민 기후운동이 제출한 일련의 요구들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또는 도덕적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후위기의 절박함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가증한 미래에 대한 상상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는 개별 정책 요구의 단순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기후정의(이 역시 원칙이 아닌 역동적이고 풍부한 이미지로서) 구현하고 기후 운동을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 수 있는 안전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그려주는 ‘스토리텔링’ 또는 ‘내러티브’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기성의 현실 정치를 바꾸려면 원칙론과 비판에서 몇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몇 년은 현행 대통령제 폐지와 내각제 도입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치 제도의 재구성, 환경과 공존 및 연대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녹색국가’ 지향을 담은 생태개헌 제안으로 우리 스스로 의제의 스케일을 키우고 대중적 토론을 촉발해야 할 때다.

기후정치와 기후운동의 공통 과제로 다음을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첫째, 제도 정치와 운동 정치 양

극단에 빠지지 않으면서 중앙/지역 정치를 급진화하고 풍부화하기 위한 구상을 만들고 공유하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당장의 지렛대가 될 의제와 정책을 확보하고 가다듬어야 한다. 여기에는 생태개헌안뿐 아니라, 한국판 좌파 그린뉴딜의 콘텐츠, 탄소세와 탄소배당 같은 핵심적 감축과 재정 확보 수단, 노동시간 단축 같은 사회적 메시지가 큰 정책과 운동 의제가 포함된다. 셋째, 녹색정동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와 실험이 시작되어야 한다. 기후정치는 무엇보다 그러한 이야기를 담아 내고 이끌어 내는, 정치를 바꾸는 정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정당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갖고 모아내고 나누는 정당일 것이다.

*이 발표문은 노회찬재단 연구 과제 「기후정치 진단 및 평가와 과제」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기후정치와 시민의회>

기후시민의회의 현황과 과제

2024.11.22.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발표 배경과 내용

❖ 발표 배경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기후정의연구기금 사업으로 진행 중인 기후시민의회 실천 안내서(2024~2025년) 연구 과제의 작업 내용 일부를 정리함. 향후 패널 워크숍 개최 등 개방적 방식으로 기후시민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세션 <기후정치화 시민의회> 발표·토론도 이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함

❖ 발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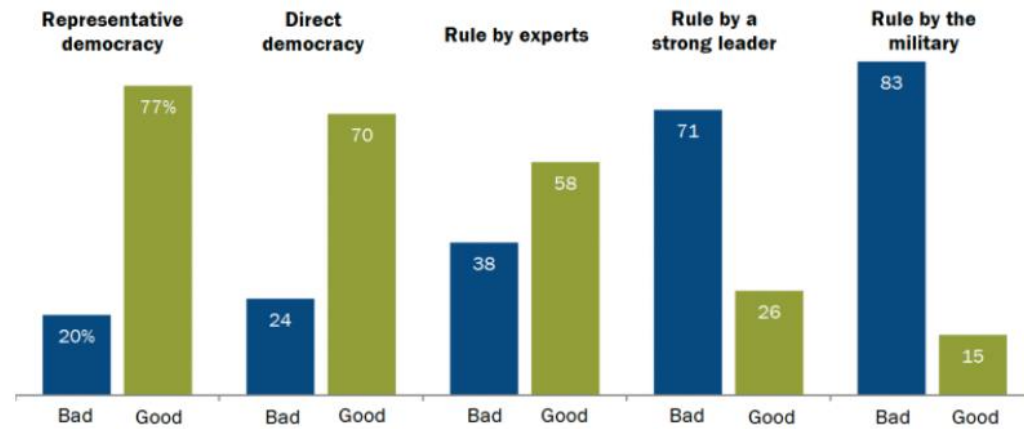
- 기후시민의회는 기후정의·정의로운 전환 운동·정치적 전략과 수단 중 하나로 접근함. 국내외 기후시민의회의 동향과 특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급진적 기후시민의회 도입·진화의 필요성, 그리고 활성화·제도화 방안 및 그 실행 조건, 실행 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토론하고자 함
- 시민의회/총회(citizens' assembly)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s), 대안적 갈등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플래닝 셀(planning cell),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대안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등 다양한 모델 포괄. 무작위 추출 숙의형 미니 공중(deliberative mini-publics) 이외 참여 방식도 포함하고, 제도적, 사회운동적 차원의 모든 유형과 사례를 다룸(People's Assembly(PA), Citizens' Assembly(CA))
- ✓ cf. 만민 공동회 ~
- ✓ cf. 공청회,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등

민주주의의 위기(비관론) & 선거 독재국가(electoral autocracy) ...

❖ 24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 분포(2023년)

Support for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across 24 nations

% who say each of the following would be a *good/bad* way of governing their country



Note: Those who did not answer are not shown. Percentages are medians based on 24 countries. Full question wording for political systems: Representative democracy, "A democratic system where representatives elected by citizens decide what becomes law"; Direct democracy, "A democratic system where citizens, not elected officials, vote directly on major national issues to decide what becomes law"; Rule by experts, "Experts, not elected officials, make decisions according to what they think is best for the country"; Rule by a strong leader, "A system in which a strong leader can make decisions without interference from [country-specific legislative body; e.g., parliament or Congress] or the courts"; Rule by the military, "The military rules the country."
Source: Spring 2023 Global Attitudes Survey, Q42a-e.
"Representative Democracy Remains a Popular Ideal, but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ritical of How It's Working"

Confidence in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declined in several nations

% who say a democratic system where representatives elected by citizens decide what becomes law would be a *very good* way of governing their country

	2017	2023	Change
	%	%	
Sweden	54	41	▼13
Kenya	42	29	▼13
Canada	43	31	▼12
UK	43	31	▼12
Nigeria	48	37	▼11
Germany	46	37	▼9
India	44	36	▼8
Netherlands	42	34	▼8
Japan	22	14	▼8
Italy	29	23	▼6
Mexico	9	15	▲6
Poland	20	33	▲13
Brazil	8	21	▲13

Not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over time are shown. Source: Spring 2023 Global Attitudes Survey, Q42b.
"Representative Democracy Remains a Popular Ideal, but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ritical of How It's Working"

Technocracy has gained support in most countries surveyed since 2017

% who say a system in which experts, not elected officials, make decisions according to what they think is best for the country would be a *good* way of governing their country

	2017	2023	Change
	%	%	
Greece	31	56	▲25
Mexico	53	73	▲20
India	65	82	▲17
Germany	44	61	▲17
Italy	40	57	▲17
Spain	49	65	▲16
Sweden	40	55	▲15
South Korea	52	66	▲14
Kenya	48	62	▲14
Hungary	68	80	▲12
UK	42	54	▲12
Brazil	31	43	▲12
South Africa	53	63	▲10
Japan	49	59	▲10
Indonesia	59	67	▲8
Poland	50	58	▲8
Argentina	46	54	▲8
Canada	41	49	▲8
Netherlands	39	45	▲6

Not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over time are shown. Source: Spring 2023 Global Attitudes Survey, Q42d.
"Representative Democracy Remains a Popular Ideal, but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ritical of How It's Working"

In several countries, significant increases in support for autocracy

% who say a system in which a strong leader can make decisions without interference from parliament or the courts would be a *good* way of governing their country

	2017	2023	Change
	%	%	
Mexico	27	50	▲23
Kenya	39	52	▲13
India	55	67	▲12
South Korea	23	35	▲12
Argentina	17	27	▲10
Poland	15	25	▲10
Germany	6	16	▲10
Brazil	27	36	▲9
Sweden	9	5	▼4
Israel	25	19	▼6
Italy	29	20	▼9
Hungary	24	15	▼9

Note: Only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over time are shown. The name of the representative body in the question differs by country. For example, the question asks "Congress" in the U.S. Source: Spring 2023 Global Attitudes Survey, Q42c.
"Representative Democracy Remains a Popular Ideal, but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ritical of How It's Working"

국내외 기후정치와 거버넌스 전망

❖ 잠정적 사회 형성 (Wainwright & Mann, 2018)

	행성적 주권	반행성적 주권
자본주의적	기후 리바이어던(Climatic Leviathan)	기후 베헤모스(Climatic Behemoth)
비자본주의적	기후 마오(Climatic Mao)	기후 X(Climatic X)

❖ 잠재적 미래 모습 (브렛 킹과 리처드 페티, 2022)

	혼란스런 미래	질서정연한 미래
포용적, 집단적	루디스탄(Ludistan)	테크노소셜리즘
배타적, 분열적	페일디스탄(Failedistan)	신봉건주의

❖ 기후위기와 AI 시대 (마크 코켈버그, 2023)

높은 가능성	혁명과 권위주의(그린 리바이어던)	불충분한 변화와 재앙(종말론)
낮은 가능성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기후 공산주의

**한국의 기후정치레짐 진단
: 기후리바이어던과 기후 X 사이**

- 일시 : 2024년 5월 23일(목) 오후 1시 ~6시(총 5시간)
 - 1부 : 오후 1시 ~ 4시
 - 휴식시간 : 30분 티타임
 - 2부 : 오후 4시 30분 ~6시
- 장소 : 정동 프란체스코회관 7층 체칠리아홀
 - 문의 : 02-880-2101

[1부 - 워크숍]

- 사회 : 이승원 박사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 발표1 : '기후 리바이어던'과 '기후 X'사이: 기후국제정치에 대한 진단 - 조엘 웨인라이트
- 발표2 : 한국의 기후정치와 국제적 기후대응에서의 탈동조화? (한국은 기후베헤모스로 이행하는가) : 정책-사회운동 맵핑을 중심으로 - 이정필(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 토론 : 김은희(여성환경연대), 민정희(국제기후총고기후시민네트워크), 김상철(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특위), 이영경(에너지정의행동)

[중간 휴식 및 티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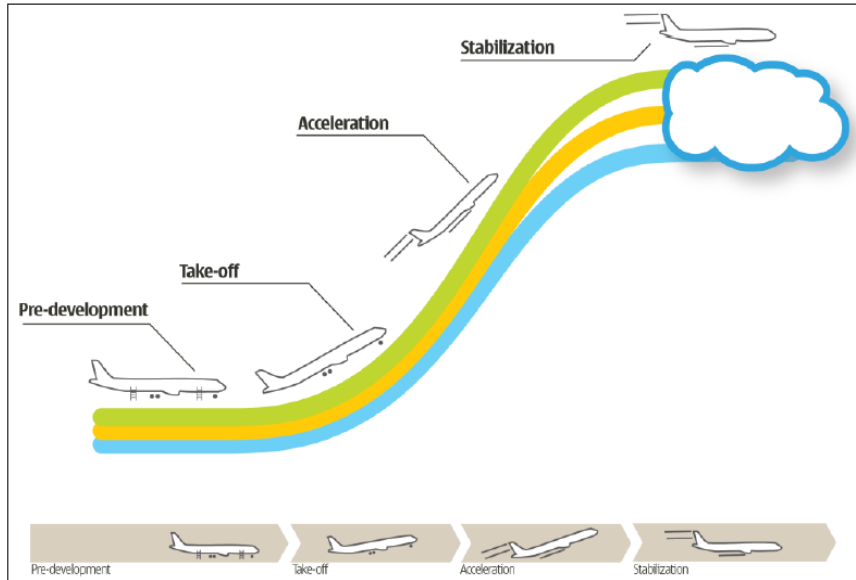
[2부 - 좌담회]

- 좌장 : 박배균 교수(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 참가자 전원

공동주최 :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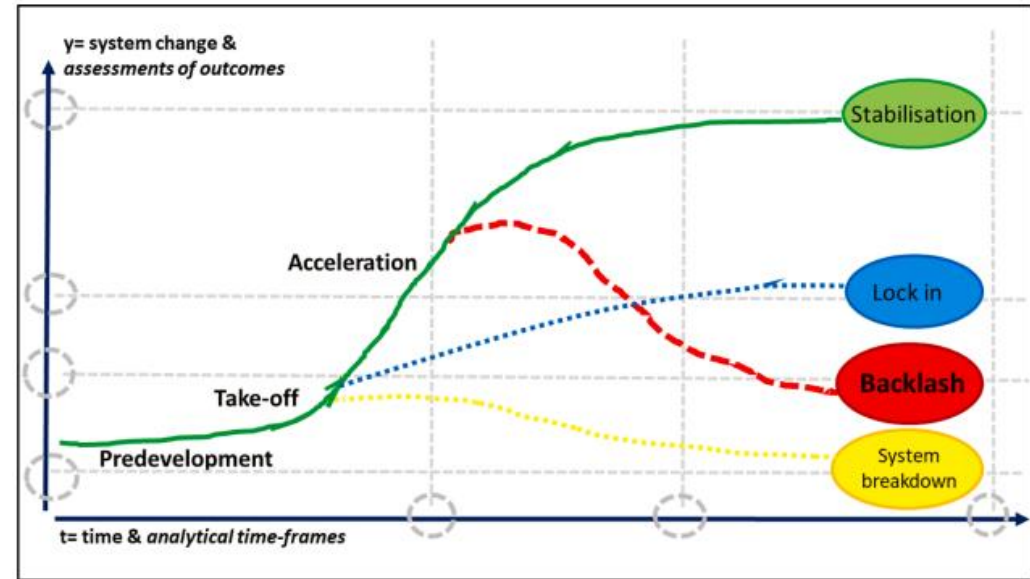
탈탄소 에너지시스템 전환의 단계와 동학

❖ 탈탄소 에너지전환 단계



자료: Laes et al.(2014)

❖ 시스템 전환 동학과 백래시 현상



자료: Pel(2021)

- 전환과정에서 전환계곡(valley of transition) 발생 당연, 사회적/환경적/경제적 논쟁, 부정적 영향/취약 집단 피해, 법제도/정책수단 쟁점, 기득권 저항 등
-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과 전환관리(transition management)를 융합하여 정의로운 전환관리(just transition management) 개념 도입(Goddard·Farrelly, 2018; Caughman, 2020), 전환실패 사전예방 및 전환과정에 대한 참여계획 추진 (Turnheim and Sovacool, 2020; Pel, 2021) 중요
- 이와 유사하게 정의로운 전환과 정의로운 설계(design for transitions) 개념을 접목할 수 있는데, 정의로운 설계는 사회적 혁신을 위한 사회적 실천과 구상으로 지배적 비전에 맞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관련 포괄적, 재구성적, 정치적, 동원적 개입을 의미함(White, 2019)
- 특히 탈성장 계획(degrowth planning) 또는 계획적 전환(planned transition)의 목표는 (1) 한계선과 우선순위 설정, (2) 민주적 참여 보장, (3) 노동의 재조직화와 노동시장 개편, (4) 생산방식과 경제구조 개편, (5)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 관리이며, 이를 통해 사회-생태적 조정(social-ecological coordination)이 강조됨 (Durand et al, 2023)

탈탄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전략 구상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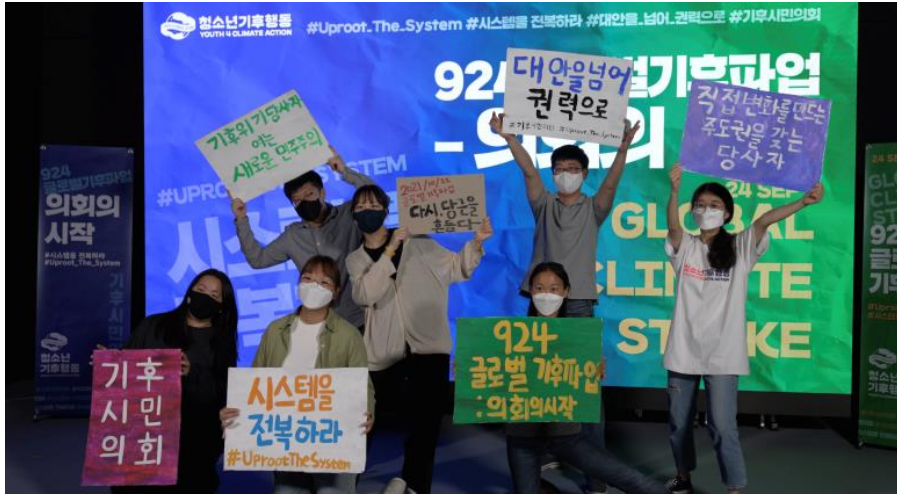
- ❖ 탈탄소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은 전환의 조건을 마련하고 그것을 재생산하는 일련의 전환 과정이 요구됨
- 전환 전략은 전환의 원칙을 (재)정립하는 가운데 현재 상태를 반영한 중점 과제 선정과 이를 위한 실현 방안의 동시적 구성이 다층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전략은 제도적 전략과 사회운동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음. 주체 형성과 아래로부터의 전환 전략을 추구하는 정치·사회세력화가 전환 동맹의 진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저항(Resist), 탈환(Reclaim), 재구축(Restructure)을 실천할 수 있음(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2; 권승문·이정필, 2017; Burke & Stephens, 2017).

	제도적 전략				↔	사회운동적 전략				
구분	로비·청원·행정개입	입법·제도 개선	국민·주민 투표	법적 소송	선거공약·개입	공론화(제도적·사회적)	대중·지역 운동	전환 실험	대안 시나리오	적록동맹
효과 수준	낮음	높음	낮음	중간	높음	높음	높음(기본)	높음	높음	높음(기본)
활용 정도	중간	높음	낮음	낮음	높음	낮음	중간	낮음	낮음	낮음

자료: 권승문·이정필(2017) 수정
 주: 효과 수준과 활용 정도는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음

‘시민의회’를 꿈꾸는 동상이몽 ?

❖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시민의회 제안 퍼포먼스(2021.9.24)



❖ 시민의회 입법추진 100인 위원회 출범(2024.5.8)



자료: 민들레(2024.5.15); 시민의회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 ✓ 정정화, 국민주도 개헌과 정치개혁, ‘시민의회’로 돌파하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24.2.5.
- ✓ 양승원, 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2024.7.29.

심포지엄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9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

공동주최 기후정치바람, 국회의원 김성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김용태(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서왕진(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 윤종오(진보당)

신청

» 프로그램

사회 김민 박웨이브 대표
최장 신근정 로컬에너지랩 대표

기초연설 "22대 국회 - 기후위기 대응을 담은 개인 논의 시작해야"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

발제

- 1 2024 총선에 등장한 기후유권자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언론의 과제 김현수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2 국회는 왜 기후유권자에 주목해야 하는가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3 22대 국회 기후 정책과 로드맵, 기후시민의 역할 이유진 녹색전략연구소 소장

지정 토론

- > 김승완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
- > 이관효 경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 > 박기남 지역에너지 전환전국네트워크 대표

정견 발표

- > 국회의원 당선자, 김용태(국민의힘, 포천시가평군)
- > 국회의원 당선자,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
- > 국회의원 당선자, 서왕진(조국혁신당, 비례)
- > 국회의원 당선자, 윤종오(진보당, 울산광역시 북구)

기후시민공론장

무엇을 가지고 시민을 만날 것인가

기후시민 가시화를 위한 각 지역 시민공론장 사례와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의 시민조직화 전략을 고민합니다

정체 사회
김문정 기후위기대응활동 공동운영위원장

2024년 10월 10일 오후 3시
온라인(ZOOM) *본문의 참가신청인

주제발표

(1) 현 시기 기후정치/시민공론장은 무엇인가	김성철 기후정치위원장(공공교통네트워크)
(2) 해외 기후시민공론장(운동) 소개와 평가	김선철 기후정치위원(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례발표

(1) 실태사제를 통해서 본 시민공론장 운동	이현석 기후정치위원(후-치정여행동)
(2) 온실가스인자예산제/탄소중립기본계획 지역 대응 사례	김현정 기후정치위원(경기기후위기비상행동)
(3) 지역기후정의행진(928행진) 조직화 사례	박옥주 민주노동총동맹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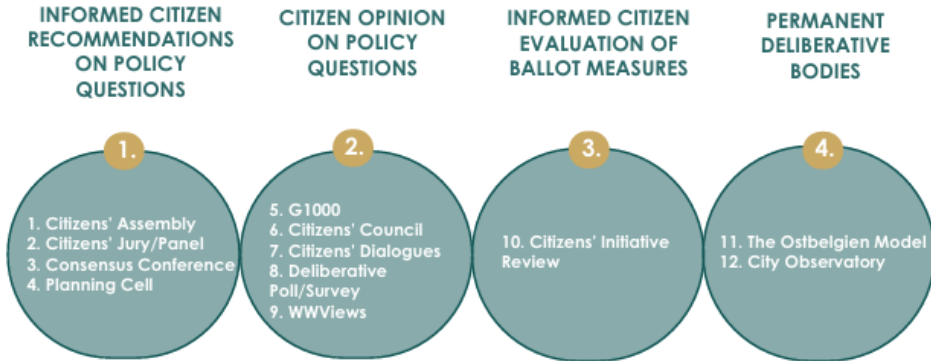
기후위기비상행동

전 지구적 속의 물결(deliberative wave) ...

❖ 시민·이해당사자의 참여의 수준과 층위



❖ 속의 민주주의의 모델과 목적



자료: OECD(2022); OECD(2020)

❖ 속의 민주주의 모델의 특성

	Complexity of the policy question		Depth of recommendations		Flexibility given to participants		Resources necessary		Length of the process		Level of government for which used so far				So far used as permanent or ad hoc	
	Simple	Complex	Broad	Detailed, extensive	Rigid format	Flexible, participant-led	Low-cost	High-cost	Short	Long	Local	Regional	National	International	Ad hoc	Permanent
Informed citizen recommendations on policy questions																
Citizens' Assembly	—	—	—	—	—	—	—	—	—	—	✓	✓	✓		✓	
Citizens' Jury/Panel	—	—	—	—	—	—	—	—	—	—	✓	✓	✓	✓	✓	✓
Consensus Conference	—	—	—	—	—	—	—	—	—	—			✓	✓	✓	
Planning Cell	—	—	—	—	—	—	—	—	—	—	✓	✓	✓		✓	
Citizen opinion on policy questions																
G1000	—	—	—	—	—	—	—	—	—	—	✓				✓	
Citizens' Council	—	—	—	—	—	—	—	—	—	—	✓	✓	✓		✓	✓
Citizens' Dialogues	—	—	—	—	—	—	—	—	—	—	✓	✓	✓	✓	✓	✓
Deliberative Poll/Survey	—	—	—	—	—	—	—	—	—	—	✓	✓	✓	✓	✓	✓
World Wide Views	—	—	—	—	—	—	—	—	—	—			✓		✓	
Informed citizen evaluation of ballot measures																
Citizens' Initiative Review	—	—	—	—	—	—	—	—	—	—	✓				✓	✓
Permanent deliberative bodies																
The Ostbelgien Model	—	—	—	—	—	—	—	—	—	ongoing	✓	✓				✓
City Observatory	—	—	—	—	—	—	—	—	—	ongoing	✓					✓

자료: OECD(2020)

전 지구적 속의 물결(deliberative wave) ...

❖ 속의 민주주의의 모델과 사례 요약

	Average no. of participants per panel	Average length of meetings	Average length from first to last meeting	No. of times used to date process (panels)	Used by countries	Result	Policy questions Addressed to date
Informed citizen recommendations on policy questions							
1. Citizens' Assembly	90	18.8 days	47 weeks	6 (6)	Canada, Ireland	Detailed collective recommendations	Electoral reforms, institutional setup, constitutional questions
2. Citizens' Jury/Panel	34	4.1 days	5 weeks	115 (168)	Austria, Australia, Belgium, Canada, France, Poland, Spain, UK, USA	Collective recommendations	Broad range of topics. Most common: infrastructure, health, urban planning, environment. Ongoing processes mandated to provide input on various questions when public authority is in need.
a) Consecutive day meetings	30	3.4 days	0 weeks	23 (40)			
b) Non-consecutive day meetings	35	4.1 days	7 weeks	90 (126)			
c) Ongoing	32	11 days	2 years	2 (2)	Canada		
3. Consensus Conference	16	4.0 days	2 weeks	19 (19)	Australia, Austria, Denmark, France, Norway, United Kingdom	Collective recommendations	New technology, environment, health
4. Planning Cell	24	3.2 days	0 weeks	57 (247)	Germany, Japan	Collective position report / citizens' report	Most common use for urban planning, but also other topics
Citizen opinion on policy questions							
5. G1000	346	1.7 days	4 weeks	12 (12)	The Netherlands, Spain	Votes on proposals	Strategic planning: developing a future vision for the city
6. Citizens' Council	15	1.7 days	1 week	14 (24)	Austria, Germany	Collective recommendations	Various topics, most common: environment, strategic pla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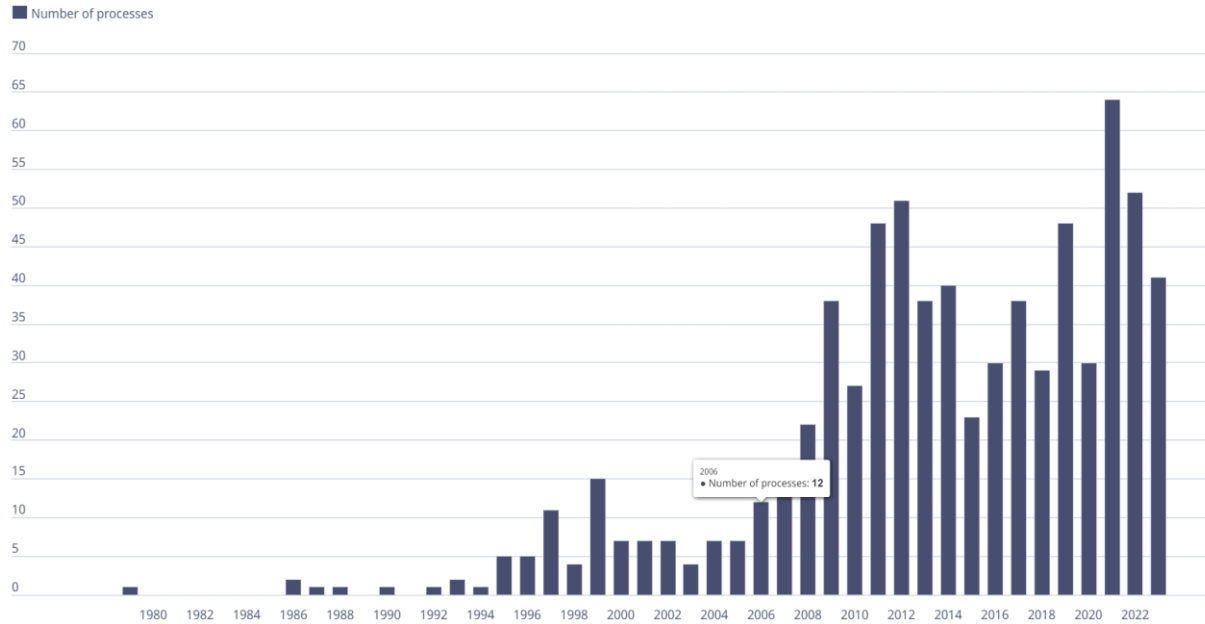
7. Citizens' Dialogues	148	2.1 days	4 weeks	38 (112)	Globally	Broad ideas / recommendations	Various topics, often several addressed at once
8. Deliberative Poll/Survey	226	1.6 days	0 weeks	14 (15)	Argentina, Australia, Brazil, China, Italy, Japan, Korea, Mongolia, USA	Survey opinions and opinion changes	Various topics
9. WWViews	120	1 day	0 weeks	4 (150)	Globally	Votes on proposals	Environment issues on a global scale
Informed citizen evaluation of ballot measures							
10. Citizens' Initiative Review	22	4.4 days	0 weeks	8 (8)	USA	Collective statement of key facts	Various topics
Permanent deliberative bodies							
11. Ostbelgien model	24	No data yet	1.5 years	1 (1)	Belgium	Collective recommendations	Mandate to set the agenda and initiate citizens' panels
12. City Observatory	49	8 days	1 year	1 (1)	Spain	Decisions on citizen proposals	Mandate to evaluate citizen proposals and suggest them for referenda

자료: OECD(2020)

전 지구적 속의 물결(deliberative wave) ...

❖ 속의 민주주의 적용의 역사적 추이(34개국, 733건, 1979~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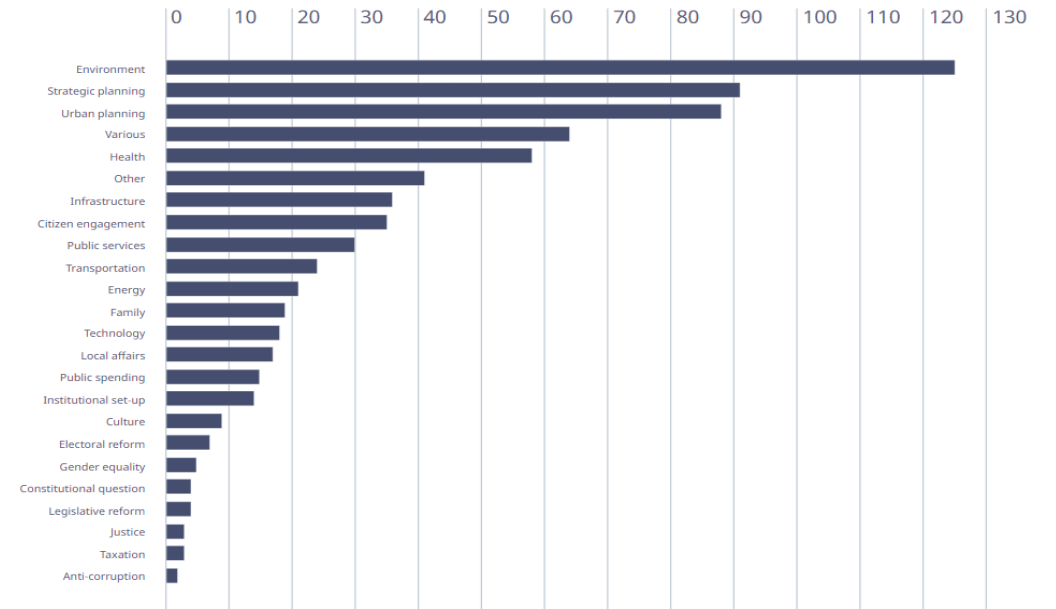
Number of representative deliberative processes over time (total per year), 1979-2023



자료: OECD, Innovative public participation; OECD Deliberative Database(2023)

❖ 속의 민주주의의 의제별 적용 현황(2021.9.~2023.9. 신규 160건 중 녹색 의제 32%)

Number of times a policy issue has been addressed through a representative deliberative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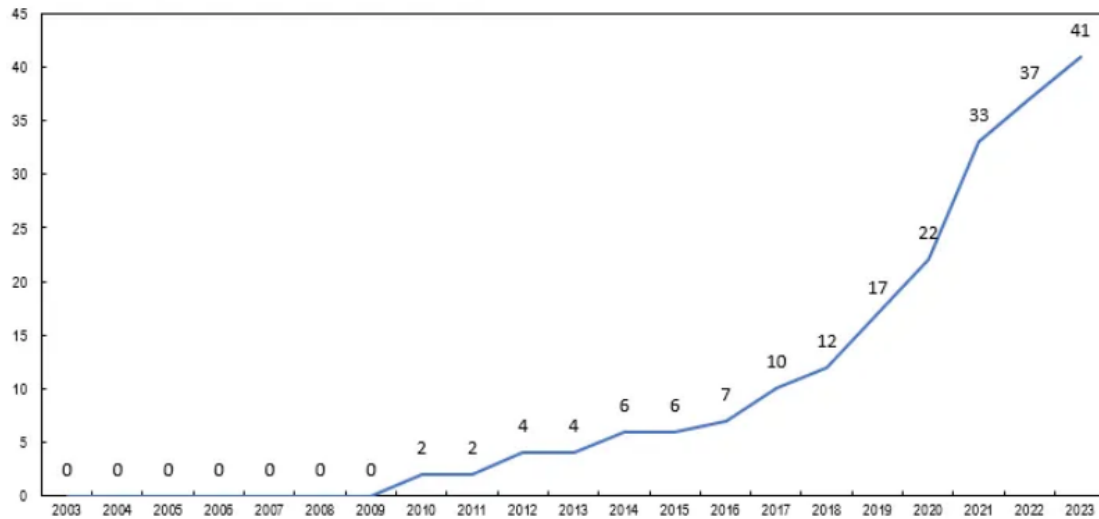


자료: OECD, Innovative public participation; OECD Deliberative Database(2023)

전 지구적 속의 물결(deliberative wav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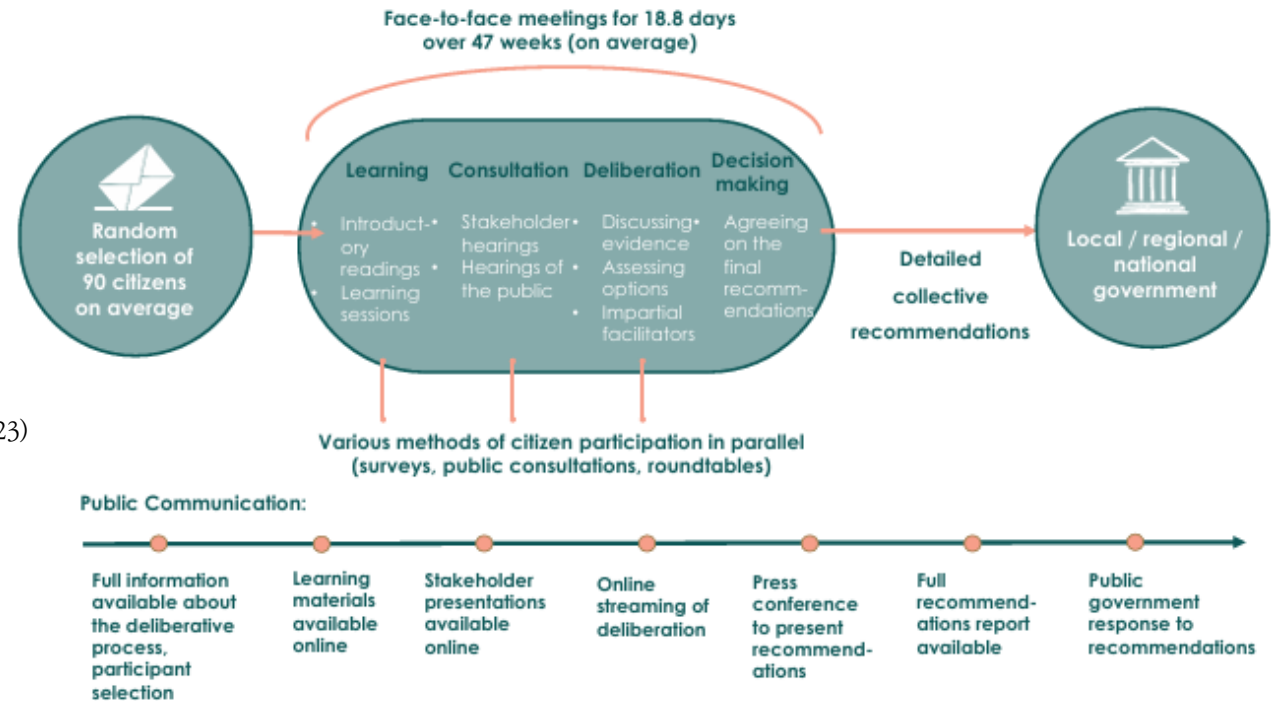
❖ 속의 민주주의 제도화 현황(누적 41건,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수)

Number of institutionalized or permanent representative deliberative processes over time



❖ 시민의회 모델

- 제도 변화, 헌법 개정, 정치적·사회적 균열 등을 해결할 필요성
- 캐나다 BC(2004년)와 온타리오(2006년)의 선거제도 개혁
- 아일랜드의 동성결혼과 낙태 이슈 5개 주제(2016~2018년, Citizens' Assembly)
-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대응으로 French Citizens' Convention on Climate(19~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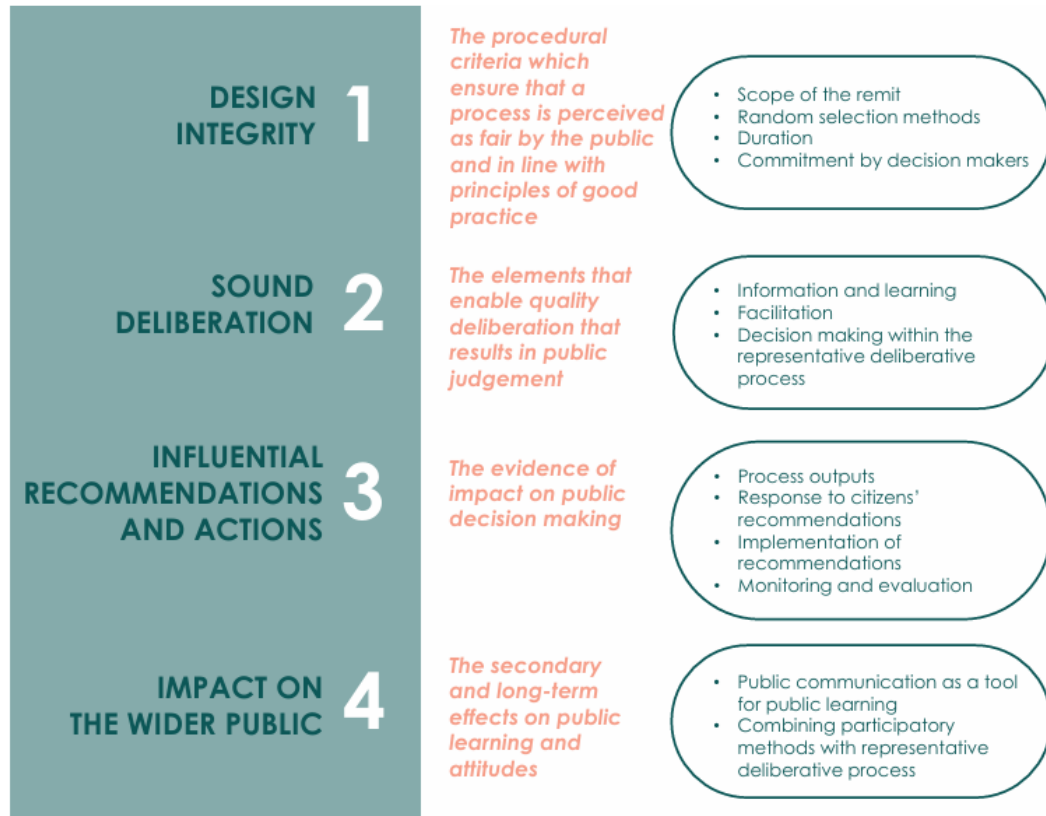


자료: 2023 Trends in Deliberative Democracy: OECD Database Update; OECD Deliberative Database(2023)

자료: OECD(2020); IEA(2021); OECD(2024)

전 지구적 속의 물결(deliberative wave) ...

❖ 속의 민주주의 분석틀



자료: OECD(2020)

❖ 의사결정을 위한 속의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



자료: OECD(2020)

전 지구적 속의 물결(deliberative wave) ...

❖ 속의 민주주의 제도화 모델



자료: OECD(2021)

❖ 속의 민주주의 제도화 모델의 특성

Institutionalisation model	Linked to	Mandate	Who initiates	Level of government	Countries
1. Combining a permanent citizens' assembly with one-off citizens' panels	A legislative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Agenda setting Initiating citizens' panels Monitoring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Asking written questions 	Embedded into law/ongoing	Local, regional/state	Belgium, France
2. Connecting representative public deliberation to parliamentary committees	A legislative body on a working 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viding recommendations Voting on recommendations 	Citizens MPs	Regional/state	Australia, Belgium
3. Combining deliberative and direct democracy	A referendum/ballot meas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Drafting a collective statement of key facts for the voters pamphlet 	Public authority	State	United States
4. Standing citizens' advisory panels	An executive body on a working 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viding ongoing citizen input on a specific issue 	Public authority	Local, regional/state	Canada
5. Sequenced representative deliberative processes throughout the policy cycle	A legislative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fferent and evolving mandate for each assembly in the sequence (proposing objectives, developing recommendations, evaluation) 	Public authority	Local	Colombia
6. Giving people the right to demand a representative deliberative process	A legislative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viding recommendations 	Citizens Public authority	Regional/state	Austria
7. Requiring representative public deliberation before certain types of public decisions	Type of dec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viding recommendations 	Legal requirement	National	France
8. Embedding representative deliberative processes in local strategic planning	Planning stage of the policy cyc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viding recommendations 	Legal requirement	Regional/state	Australia

자료: OECD(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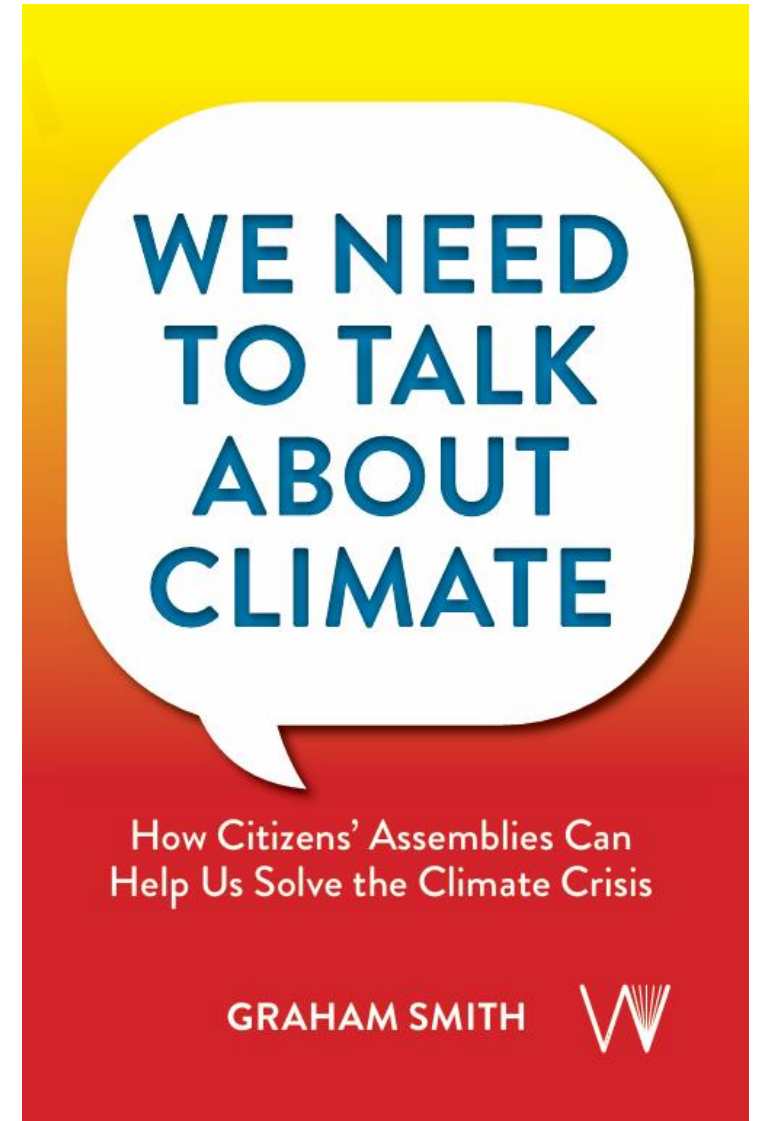
기후시민의회 추진 사례와 관련 네트워크



자료: Knowledge Network on Climate Assemblies(KNO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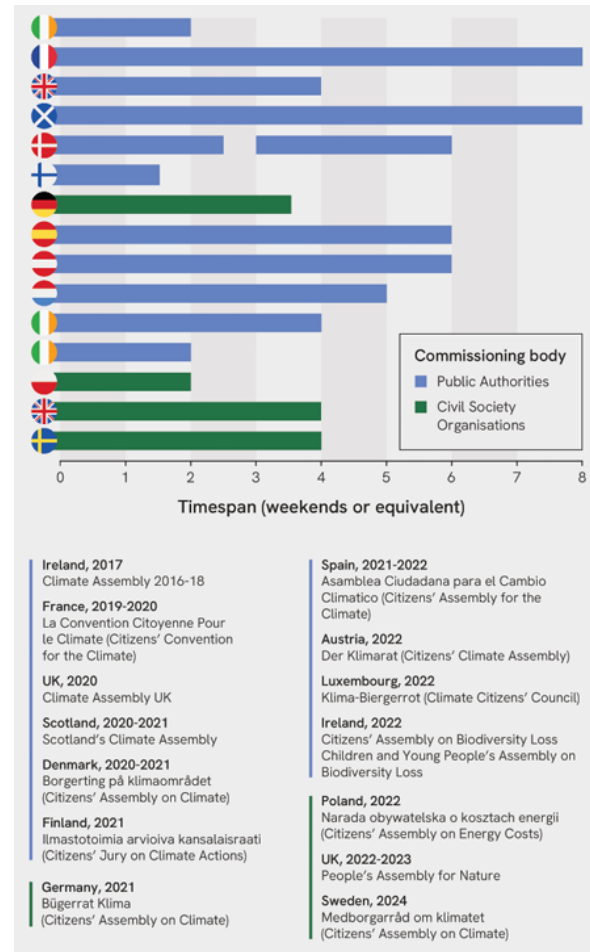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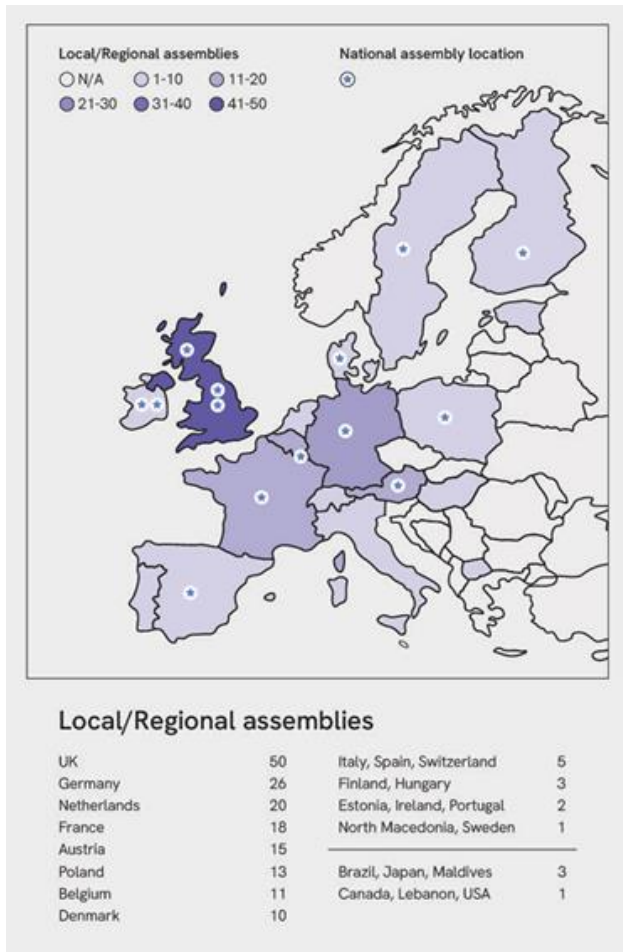


자료: Global Citizens' Assembly Network(GloC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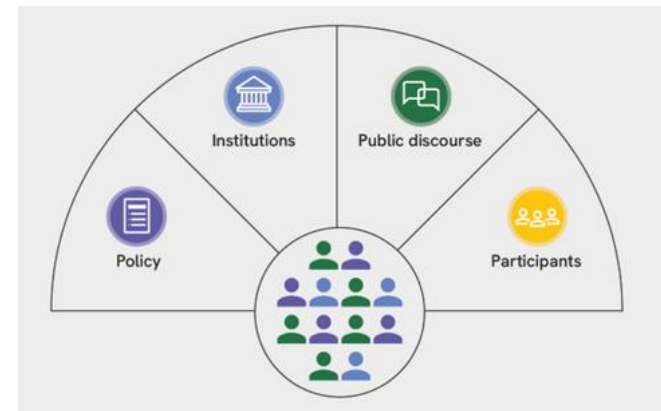
기후시민의회 추진 사례와 관련 네트워크

❖ 기후시민의회 주요 사례



❖ 기후시민의회의 주요 특징과 분석틀

구분	주요 내용
정치적 맥락	의회 조직화를 이끈 사회적, 정치적 요인은 무엇인가?
주최/주관	어떤 기관이 의회를 운영하는가?
규모/스케일	의회 참여자는 몇 명이고, 운영 기간은 얼마인가?
선정 방식	의회 참여자의 구성은 얼마나 다양한가?
의회 역할	의회의 임무는 무엇인가?
거버넌스	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얼마나 독립적, 협력적으로 진행되는가?
운영 프로그램	의회의 세부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되고 운영되는가?
토론 촉진	퍼실리테이터와 전문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소통과 대중 참여	의회 참여자 이외 폭넓은 대중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고와 권고	의회의 결정사항은 어떻게 제출되는가?
제도적 반응	주최/주관 기관은 의회 결정/합의사항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점검 및 평가	의회 구성/운영의 경과와 결과에 조사 및 평가는 어떠한가?



자료: Smith(2024); KNOCA; GloCAN

	Citizens' Assembly 2016–2018, Ireland	Citizens' Convention for the Climate, France	Citizens' Assembly UK	Scotland's Climate Assembly	Denmark's Climate Assembly	German Citizens' Assembly on Climate
Timing	Sep–Nov 2017. Two weekends in person	Oct 2019–Jun 2020. Seven weekends in person plus two interim sessions online. Feb 2021. Additional weekend in person to review official response	Jan–May 2020. Three weekends in person plus two weekends online	Nov 2020–Mar 2021. Seven weekends online. Additional weekend in person to review official response	Oct 2020–Mar 2021. First phase. Two weekends and three evenings, plus ad hoc meetings for editing. All online. Oct–Dec 2021. Second phase. Similar structure	Apr–Jun 2021. Eight weekday evenings and four full Saturdays online
Commissioner	Government with parliamentary resolution	President, although formally established by letter from Prime Minister	Six parliamentary select committees	Scottish Government following amendment to climate legislation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Utilities	Bürgerbegehren Klimaschutz, Scientists for Future
Remit	How the state can make Ireland a leader in tackling climate change?	How can France cut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by at least 40% by 2030 compared to 1990, in a spirit of social justice?	How can the United Kingdom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net zero by 2050?	How should Scotland change to tackle the climate emergency in an effective and fair way?	To contribute and provide recommendations to the political process of climate transition, in particular to the Climate Action Plan	To make recommendations for Germany to comply with Paris Climate Protection Agreement while considering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compatibility
Participants	99	150	108	105	99	160
Internal practices	Whole assembly considered all issues Small group facilitation Developed own proposals Plenary votes on proposals	Randomly divided into five thematic groups decided by organisers Self-directed groups Developed own proposals Plenary votes on proposals	Randomly divided into three thematic groups decided by organisers Small group facilitation Primarily considered expert generated options Thematic groups voted on proposals. Plenary on common proposals	Randomly divided into five thematic groups decided by organisers Small group facilitation Developed own proposals Plenary votes on proposals	Randomly divided into five thematic groups informed by citizens' deliberations Self-directed groups Developed own proposals Plenary votes on proposals	Randomly divided into five thematic groups decided by organisers Small group facilitation Developed own proposals Plenary votes on proposals
Output	13 recommendations	149 draft laws, regulations and referendums	51 recommendations (with over 80% support)	81 recommendations	117 recommendations in first phase 73 in second phase	84 recommendations
Official response	Considered by Joint Oireachtas Committee on Climate Action (JOCCA) which influenced government's Climate Action Plan 2019 and subsequent Climate Action Bill 2020	Macron originally promised "no filter" for proposals. Climate and Resilience Law translates some aspects of the proposals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Select Committee inquiry and report on the findings	Official government response published in December 2021	Government committed to treat recommendations in the same way as "climate partnerships" established with major sectors of society and economy	Public responses from most political parties during federal election campaign
Budget	€1.5 million for whole assembly which lasted over a year	€5.5 million	€620 K (most coming from foundations)	£1.4 million	€74 K (delivery organization, Danish Board of Technology cross-subsidized)	€1.9 million

기후의회(climate assembly) 어떻게 시작할까



❖ Scale: 전국 단위 vs 지역 단위

- 사례: Camden Citizens' Assembly on the Climate Crisis(2019년) 등 성공
→ Climate Assembly UK(2020년) 개최
- ✓ 지구적 스케일에 대해서는 Vlerick(2020); Dryzek, et al(2011); Dryzek & Niemeyer(2024) 참조

❖ Advocacy: 사회적 조직화와 정치적 개입

- 사례: 기후운동의 청원과 압박, Warsaw Climate Panel(2020년) 개최

	Pros	Cons
Lo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ople are closer to the issues. • There is more time for deep discussions. • Political barriers may be lower if the city supports more ambitious climate action than the country as a who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re are limits to the action that local governments can take to address climate change. • Local governments may have relatively fewer resources to devote to organizing a climate assembly.
N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bitious emissions reductions have to be legislated at the national level. • National CAs have more media exposure, which can help drive public deb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design process at the national level is more difficult because more actors are involved. • People may be more detached from national challenges.

You need a **diverse team** of advocates and a **range of tactics** to win government approval for a CA.



자료: peoplepoweredhub.org/climate-assembly

기후의회(climate assembly) 어떻게 시작할까

❖ Design: 주제와 질문

- 사례: Scotland's Climate Assembly(2020~2021년)
“How should Scotland change to tackle the climate emergency in an effective and fair way?”

❖ Technical Support: 사회적 조직화와 정치적 개입

- 사례: French Citizens' Convention on Climate(2019~2020년),
Decidim 플랫폼과 Iramuteq 오픈소스 활용 등
- ✓ 기후의회에 AI 기술 접목에 대한 검토는 McKinney(2024) 참조

How can the council and the people of Camden help **limit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while protecting and enhancing our natural environment?

How to **increase the energy efficiency** of Warsaw and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city's energy balance?

How can France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at least 40 percent (from the 1990s level) by 2030, in the spirit of social justice?



자료: peoplepoweredhub.org/climate-assembly

How to Start a Climate Assembly



Determine
which scale
is right

- Research **whether other CAs, panels, or citizens' assemblies or juries** have taken place in your city or country.
- Weigh the pros and cons of local and national CAs in the context of your city and country.



Design an
advocacy
strategy

- Meet with allies** at your organization or institution to build an internal advocacy team.
- Contact other advocates and organizations passionate about participatory climate action **to join forces in advocating for a CA.**
- Contact politicians and civil servants who **might be interested in supporting a CA.**
- Use online tools, like petitions and social media, to **educate the public** about CAs and build political support.



Answer **key
planning
and design
questions**

- What problem** do you want to solve?
- What will be the **framing question** of the CA? How will you incorporate fairness and equity in the framing question?
- How will the outputs of the CA **translate into action?** Will the recommendations be binding?



Identify
technical
needs and
partners

- Meet with **climate scientists** who can help identify experts and stakeholders to provide testimony.
- Meet with **organizations that specialize in facilitation.**
- Identify **digital platforms** to collect public input and analyze contributions.

Next St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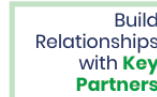
- Visit **People Powered's resource center** for guides and other resources.
- Sign up for **People Powered's mentorship program** to get coaching from an expert.
- Contact potential partners to **form an advocacy team:** climate organizations, community groups, government champions, and support organizations.

How Cities Can Use Participatory Budgeting to Address Climate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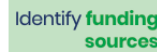
Understand
Local Impacts
of Climate
Change

- Meet with climate change experts** (researchers, municipal climate office, environmental NGOs) to identify local climate risks.
- Meet with community and neighborhood leaders** to understand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and likely concerns for a participatory process.
- Review the city climate plan**, if one exists, and identify which goals and projects would benefit from PB and public engagement.



Build
Relationships
with **Key
Partners**

- Meet with relevant city departments and agencie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to invite them to help plan and lead the process.



Identify **funding
sources**

- Explore potential climate-related funding** from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and sponsorship by companies.



Make the
Case to
**Political
Leaders**

- Environmentally just:** As flooding, heatwaves, and other climate-related problems become more severe, citie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most vulnerable communities.
- Economically sound:** Allocating funds **now** to adaptation projects, such as improved drainage in areas vulnerable to flooding, can reduce emergency spending **later.**
- Politically strong:**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requires major changes. When communities decide these changes, they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m and less likely to push back.



Design a
**Targeted
Process**

- Determine **which type of PB process** is best for your city.
 - Are certain neighborhoods most impacted by climate change? **Place-based process**
 - Are certain sectors (transportation, energy, etc.) most in need of climate-related adaptation? **Sector-based process**
 - Are certain populations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ctor-based process**
- Create communications materials** that help people understand climate change impacts in their communities and how they can take action through PB. Use examples, visuals, and plain language.

Next Steps

- Meet with key climate change experts or champions** in your city government, to see if there's institutional support.
- Meet with key organizations** working on climate change, to see if there's community support.
- Sign up for People Powered's mentorship program** to get coaching from a climate PB expert.

기후의회(climate assembly) 어떻게 시작할까

- ❖ Extinction Rebellion(Global, UK) 실천 및 요구 사항
 - People's Assembly(PA)와 Citizens' Assembly(CA) 실행
 - Citizens' Assembly on Climate and Ecological Justice(Climate and Nature Bill)
 - Community Assemblies Escalation Plan
 - ✓ cf. Climate Majority Project(2023년~, UK)
 - ✓ cf. World People's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People'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nd the Rights of Mother Earth, 2010년)



자료: Extinction Rebellion(Global: UK)

CITIZENS' ASSEMBLIES BASIC STANDARDS FOR ORGANISING

RANDOM SELECTION OF PARTICIPANTS

All members of a citizens' assembly are selected by lot. Ideally, every member of the population eligible to take part in a citizens' assembly should be able to potentially receive an invitation to participate.

DEMOGRAPHIC REPRESENTATION

The composition of a citizens' assembly should broadly match the demographic profile of the communit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A set of criteria may be used to ensure demographic representativeness of the group, like age, gender, geographic area, or others. The aim is to create a community in a small scale that 'feels like us'. The size of the group should allow for inclusion of a wide diversity of views. A stipend should be provided to all participants to the amount that would at least cover the costs of attending the citizens' assembly.

INDEPENDENT COORDINATION

The citizens' assembly is run by an independent team of coordinators, which is responsible especially for preparing the process of random selection, developing the agenda, and inviting experts and facilitators. If the citizens' assembly is organized by local authorities or the parliament, it is important that all members of the coordination team are not part of the civil service. The coordinators should be impartial, e.g. not active politicians or direct stakeholders.

CITIZENS' ASSEMBLY CAN INVITE EXPERTS

Despite the programme being prepared by the team of coordinators, the citizens' assembly can invite additional experts of their own choice. This may be in the form of a speech in person, a video streaming, a recording, a written note or other.

INCLUSION OF A WIDEST PRACTICAL RANGE OF PERSPECTIVES

If there are diverse solutions and perspectives on a subject, ideally all of them should be presented during the educational phase of the citizens' assembly (by expert speakers). A method of combining perspectives due to a limited time or other practical considerations may be applied. Presentations may have the form of a speech in person, a video streaming, a recording, a written note or other.

INVITING ALL STAKEHOLDERS

Any organization, informal group or an institution whose area of work and expertise is related to the topic of the citizens' assembly has the right to present its opinion to the citizens' assembly in person. The role of the team of coordinators is only to identify the stakeholders – they don't make a selection. Due to limited time and a large number of stakeholders, a method of choosing their representatives may be used. In this case, a diversity of perspectiv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COMMUNITY ASSEMBLY MANUAL

HOW TO ORGANISE AND RUN ASSEMBLIES IN YOUR COMMUNITY

국가 수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사이클 중 2단계(참여와 숙의) 방안

Name	Concepts reflected	Description	Strengths	Limitations	Requirements	Guidance or examples
Targeted interviews or focus groups	Consultation directly with individuals, e.g. as workers, consumers or citizens	Structured or semi-structured sessions with individuals or small groups to discuss their experience of economic change (e.g. siting of infrastructure, working conditions in new industries)	Provides deeper understanding of individuals' lived experience and organisations' positions on an issue, driving both wellbeing and political behaviour. Can contextualise quantitative analysis (see 1.2.2) and other participation approaches.	Not representative: should be complementary to a wider consultation strategy. Highly resource-intensive per person, implying a limited number of people can be reached.	Third-party organisations likely needed to conduct interviews of groups. Partnerships with local organisations (government, NGOs, unions) to access affected stakeholders. Can draw on technology e.g. social media to inform recruitment approach.	O'Beirne et al. (2021) The UK net-zero target: Insights into procedural justice for greenhouse gas removal Scheer et al. (2022) Whose jobs face transition risk in Alberta? Understanding sectoral employment precarity in an oil-rich Canadian province
Online participation	Consultation with a large, self-selected group of the public	Surveys or discussion sessions open to all (subject to any chosen criteria, e.g. age), using remote technology.	Enables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en masse and with people who might not join in-person processes. Large datasets of responses can be disaggregated for insights on particular groups.	Not representative: self-selection biases against those who are unaware or unable to participate. Less effective at providing information to participants and creating space for critical reflection.	Support provided to people who lack the means or knowledge to use online technology.	Itten and Mouter (2022) When Digital Mass Participation Meets Citizen Deliberation: Combining Mini- and Maxi-Publics in Climate Policy-Making
Deliberative research for transition planning	Representative deliberation, between consultation and co-creation	Structured workshops bringing together a randomly selected, representative group of people, presented with planning questions and preliminary analysis on transition impacts.	Can produce principles or criteria for decision-making within a multi-faceted process. The considered consensus that results can be perceived as a highly legitimate basis for decision-making.	Ineffective at providing 'hard' metrics for policymakers to apply directly to specific policy problems. Need to find consensus can dilute proposed solutions to the point of being ineffective. Highly resource-intensive.	Third-party organisations should carry out workshops to ensure independence from political incentives. Plan for communicating findings to stakeholders within and outside of government. Fruitful discussion may require screening out individuals with strongly held negative views on climate action.	Mulholland et al. (2020) Understanding and engaging the public on climate change

자료: Dryzek et al.(2023)

국가 수준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 사이클 중 2단계(참여와 숙의) 방안

Name	Concepts reflected	Description	Strengths	Limitations	Requirements	Guidance or examples
Citizens' assembly	Representative deliberation, between consultation and co-creation	Random selection of participants; a structured process combining information,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on policy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decarbonisation.	Recommendations can reflect preferences of an informed public with capacity to consider dilemmas and trade-offs, situating decarbonisation in the context of wider transformations in the economy and society.	Wider societal legitimacy is not guaranteed but requires considered communication, transparency, and clarity on role in policymaking process. Most resource-intensive, but can be lowered over time if the practice is repeated.	Buy-in from decision-makers in relevant departments. Choices on sensitive design features, including the remit. Third-party organisations should carry out the process to ensure independence from political incentives.	KNOCA (2023) Guidance OECD (2020) Innova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New Democratic Institutions
Climate or just transition commission	Co-creation between key stakeholder representatives	Governance of decarbonisation overall or sector-specific transitions, involving key stakeholder organisations (and community representatives if at local level).	Transition pathways that emerge from collaboration are likely to enjoy broader support. Potential to provide independent evidence, build knowledge and capacity, and lead to innovative measures.	Collaborative actions can take longer to emerge despite partnership building and convening. National commissions will be dominated by large organisations. Maintaining vision and direction in the context of clashes in perspectives can be a challenge.	Budget and staff to establish a secretariat. Clear terms of reference.	New Zealand's Just Transition Partnerships created regional bodies to manage oil and gas phase-out in Taranaki and industrial closure in Southland Pringle et al. (2023) Evaluation of the Impact of PCAN-supported Climate Commissions
Collective bargaining for transition	Co-creation between worker/ business and government representatives	National-level forums or sectoral deals between government, union and business associations.	Agree terms of workforce transition, including training, financial support, supporting social policies (e.g. early retirement).	Restrictive laws may prevent collective bargaining. Divergent views on net zero among unions and business associations may create barriers that require additional stages of dialogue.	Enabling laws or regulations that create legitimate structures for bargaining (including by incentivising firms). Analysis on labour force and industry-specific transition effects (see Phase 1).	Instituto para la Transición Justa (2022) Spain, towards a just energy transition: Executive Report

자료: Dryzek et al.(2023)

기후시민의회의 주요 쟁점과 잠정 평가

❖ 왜 기후시민의회인가?, 왜 관심이 증가하는가? (그러나 여전히 주류적 방식은 아니다!)

- 근시안(myopia)·단기주의(short-termism), 과학과 전문성이 활용되는 관행, 정치·경제권력의 영향력, 민중과 대의 정치인의 관계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대의 민주주의는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등에서 시도된 숙의 민주주의가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하다는 판단 확산(Willis et al., 2022). 또는 mini-public(시민)과 legislative committee(엘리트)의 designed coupling 의미와 필요성(Hendriks, 2015)
- 현행 민주주의와 낡은 제도의 시간 리듬은, 한편에서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 행성적 수준으로 확대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 속도와 환경 영향이 압축적으로 가속화되는, 이렇게 시간대가 이중으로 뒤틀리는 기후위기 시대 및 인류세의 시간성과 충돌함. 따라서 기후위기로 초래된 시간적 지향성(temporal orientation)에 대해 기후정치 측면에 검토해야 함. 다양한 시간 리듬을 갖고 그에 맞는 민주주의 비전을 갖는 deliberative assemblies(기후시민의회), community organizing(지역사회 자립 실천), activist movements(멸종반란) 등 다양한 방식이 나타남(Ejsing, 2024)

❖ 기후시민의회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문제제기와 다양한 비판

- 공통적인 쟁점은 시민 자격·능력(대표성과 숙의성), 대의제와의 관계 및 독립성(법제도적 근거), 의사결정 권한·범위, 정치 과정 영향력과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법적 수용성 등
- 무작위 추출 미니 공중의 참여 방식이 나름의 의미를 갖지만,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일 뿐 숙의·참여 민주주의의 최적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음. 대표성과 숙의성을 담보하는 다른 방법도 있으며, 특히 사회운동적, 체제 저항적 성격의 참여 민주주의가 다양한 공간에서 대안적 형태가 존재함(Willis et al., 2022)
- (추천 기반의) 숙의 민주주의에 긍정성이 있지만, 사회운동이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숙의형 참여 방식이 실효적이어야 함. 시민의회의 권한·권력과 구성·운영, 전문가·이해당사자의 역할 등이 중요한 과제임. 특히 의사결정 권력·권한의 스펙트럼(legislative, co-legislative, agenda-setting, consultative) 중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핵심적 이슈가 됨(Mulvad & Popp-Madsen, 2021)

기후시민의회의 주요 쟁점과 잠정 평가

❖ 지배 질서의 수동 혁명?

- 2010년, 호주에서 기후시민의회 제안, 그러나 정치적 논쟁과 저항으로 불발(Boswell et al., 2013)
- 2016년~, 정부 기획, 사회적 요인, 국민 청원, 연정 프로그램, 또는 시민사회 및 연구기관의 자발적 추진 등 국가 및 지역 단위 기후시민회의 도입 및 확산
- 정치 과정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당 체계와 선거 민주주의 신뢰 유지, 엘리트 정당 및 선거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시민의회를 활용한다는 문제 제기(Macq & Jacquet, 2023)

❖ 기후시민의회의 두 가지 비전

- 기후 관련 법과 정책을 개선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제한적 반영이라는 한계 역시 주목해야 하고, 기후시민의회와 전통적 의사결정 과정의 관계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Duvic-Paoli, 2022)
- 내적 설계 쟁점(internal design characteristics)과 함께 기후시민의회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맥락 및 거버넌스를 포괄하여 접근·평가하는 통합적 설계 쟁점(integrative design characteristics)에 주목해야 함(Boswell et al., 2023)
- 변화의 주체/공간 vs 여론 분포 확인? 기후시민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민주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급진적 비전에 주목해야 함(Ejsing & Papazu,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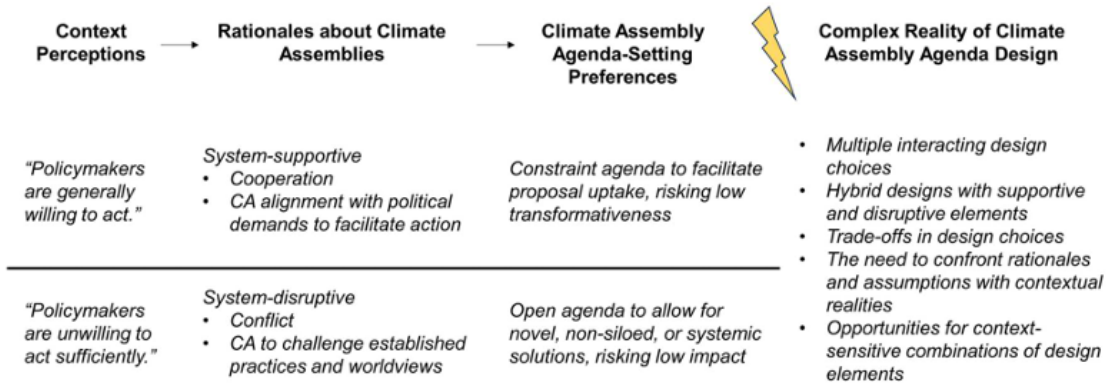
구분	민주주의 논리	참여 방식	정치적 목적	변화 기제
숙의적	대표성	중재/매개	정당성	(국가)제도 정치
급진적	자율성	전환/변혁	역능/동원	다중 스케일 실천/개입

자료: Ejsing & Papazu(2023)

기후시민의회의 주요 쟁점과 감정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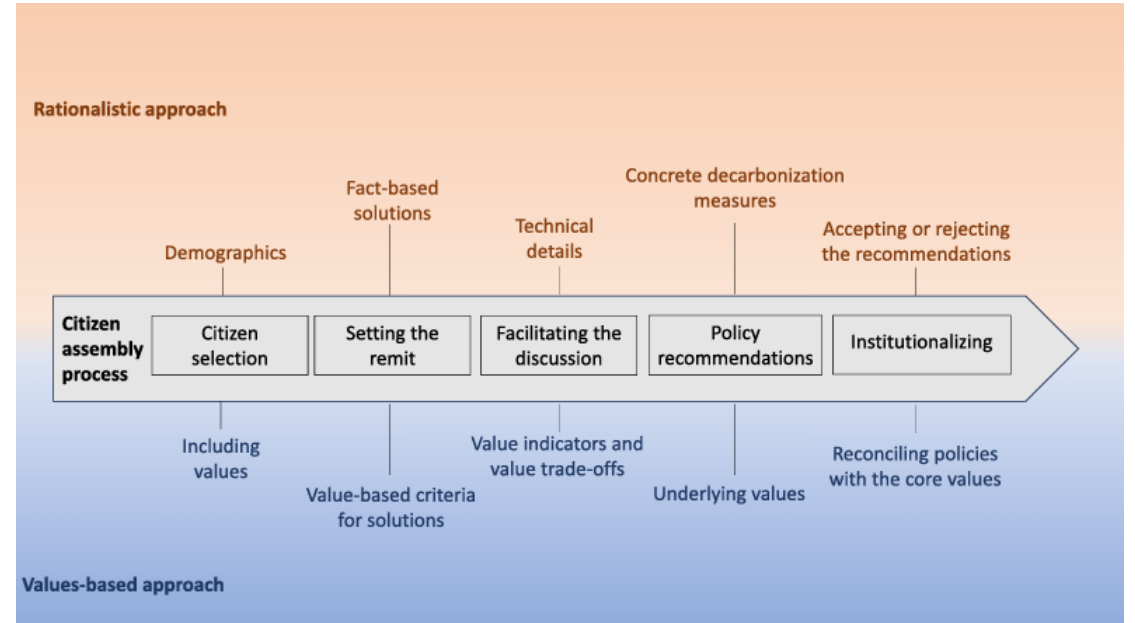
❖ 기후시민의회 의제설정 쟁점

- 의제설정 쟁점(scope, authority, societal relevance, political relevance, receptiveness, timing, dilemmas, legitimacy, openness, resource efficiency)



자료: Pfeffer(2024)

❖ 합리주의 접근에서 가치 기반 접근으로 전환 필요



자료: Perlaviciute(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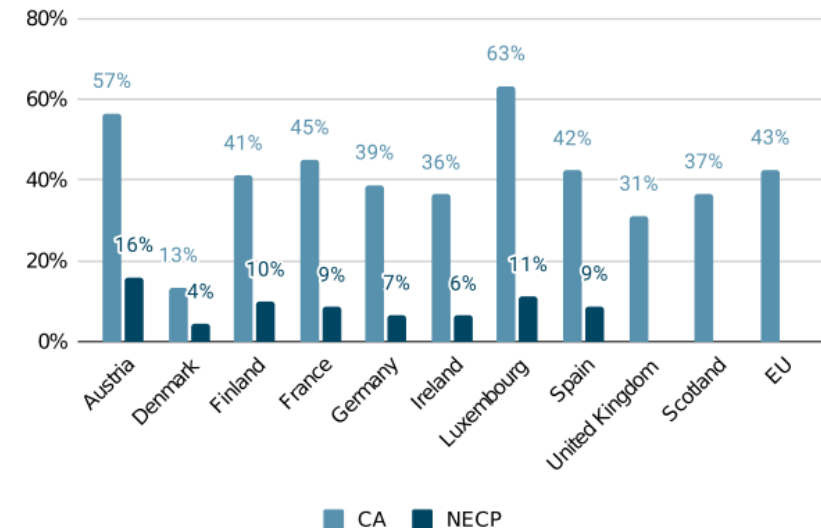
기후시민의회의 주요 쟁점과 감정 평가

❖ 독일 탈석탄위원회 평가

- 2018~2019년, 독일 탈석탄위원회(Commission on Growth, Structural Change and Employment라는 사회적 합의 과정 추진(의결권 보유 위원 28명은 이해당사자,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
- 독일 탈석탄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발전사업자 보상과 노동자 지원 정책을 포함한 탈석탄법(Act to Reduce and End Coal-Powered Energy and Amend Other Laws, 2020년), 탈석탄 지역의 구조개편과 인프라 구축 정책을 포함한 석탄지역구조지원법(Structural Support for Coal Regions Act, 2020년) 제정
- 독일 탈석탄위원회의 합의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과 정책을 일정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지만, ① 불충분한 이해관계 대변, ② 다양한 실행 옵션 제시 부재, ③ 파리협정과 의 정합성 부족, ④ 장기계획 마련에 필요한 자료 제공 부족, ⑤ 탄소 가격제의 효과성 문제, ⑥ 발전회사 보상 문제, ⑦ 공급 안정성 위험 논란, ⑧ 산업경쟁력 위험 문제, ⑨ 연방 예산의 부담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음(Agora Energiewende and Aurora Energy Research, 2019)

❖ 유럽 국가의 에너지·기후계획(NECP)과 기후의회(CA)의 충족성 선호도 비교

- 충족성에 대해서는 ① 물질과 에너지 총량 감축, ② 생태적 한계선과 사회적 기초 반영, ③ 저소비 계층·지역의 물질·에너지 사용 보장 및 불평등 해소, ④ 물질적 소유에서 비물질적 가치에 기반한 웰빙 지향 등 여러 차원에서 접근 (Persson & Klintman, 2023)
- 국가 계획과 비교하여 시민사회(시민의회 참여자)는 충족성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Lage et al.(2023)

국내 에너지·기후 공론화 및 기후시민의회의 흐름과 사례

- ❖ 중저준위 방폐장 불안항쟁과 독자적 주민투표(2003~2004년), 경주/영덕/포항/군산 경쟁 주민투표(2005년)
- ❖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2004년)



- ❖ 밀양지역 송전탑 갈등조정위원회(2009년)와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2013년) 실패
-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시민이 만드는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2014~2015년)
-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 지방정부 숙의적 시민참여형 에너지·기후 관련 계획 수립(2015년~)
- ✓ 성과와 한계 확인, 특히 확산 효과는 있으나 대부분 형해화(“좋은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다”)
- ✓ 이외 리빙랩/전환랩, 공동설계 프로그램 등 개별 사업에 대한 참여형 프로그램 설계 및 적용
- ❖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 민관협의회(2019~2021) → 정상화추진위원회(2021) → 민관정책협의회(2022~)
-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독자적 공론화 진행 중



국내 에너지·기후 공론화 및 기후시민의회의 흐름과 사례

❖ 고준위 방폐장 공론화

- 2013~2015년, 사용후핵연료 처리 공론화위원회(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
- 2019~2021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2)

공론화 추진과정의 문제점

2차에 걸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정부 주도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추진에서 시민참여 방식으로 정책추진을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공론화 과정의 속의성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위원회 독립성·중립성 문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민간자문기구

문제점 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에 있어 위원회 활동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비판과 위원 구성에 있어 독립성·중립성 약화 등의 논란이 제기됨

공론화 과정의 속의성(熟議性) 결여 문제

사용후핵연료 같은 국가 단위 공공정책 공론화는 논의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참여자의 관점, 경험 등이 논의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문제점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검토위원회에서는 중립성을 명분으로 원전 주변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를 공론화위원회에서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로만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분 논의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차단했다는 비판을 받음

국내 에너지·기후 공론화 및 기후시민의회의 흐름과 사례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시민참여단, 2017년 7~10월)

말해나눔은 출간 토론회

에너지정책의 공론화, 중간평가와 과제

말해나눔이 발간 에너지정책을 반영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공론화를 통해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 시간은 종료됩니다. 에너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론화의 필요성은 이미 복고론에서도 그 필요성과 과정에 대한 평가는 나왔습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함께 새로운 단계에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말해나눔은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공론화 관련 정책의 실효성 평가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공론화 관련 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는 에너지정책연구소 에너지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 에너지 민주주의, 냉정과 열정 사이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돌아보는 토론회로, 출간 기념행사인 말해나눔, 말해나눔을 계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공론화 관련 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말해나눔을 계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공론화 관련 정책의 실효성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 2019년 3.5(화) 오후 3-6시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420호 (서울 정동)

시민행사 | 출간 기념식

사회 진상현 | 경희대학교 교수

발표1 이병희 | 가톨릭대학교 교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낳은 것
발표2 이현석 | 에너지정책연구소 대표 서울환경운동 공론화의 쟁점
발표3 김원우 | 에너지정책연구소 에너지정책에서 시민참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 강영진 | 한양대 심층문화연구소장
김수진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김재남 |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윤석욱 | 울산정책공공연구소 집행부 위원

사후행사 | 말해나눔 미디어협동조합 서울 발기인 대회

주최 에너지정책연구소, 에너지정책연구소
후원 말해나눔, 에너지정책

문의 에너지정책연구소 | 02-640-4-8440, 에너지정책연구소 | 02-702-4399



- ❖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시민회의
- ❖ 2021년 7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초) 발표
- ❖ 2021년 8~9월,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의견수렴
- ❖ 2021년 8~9월, 탄소중립 시민회의(참여시민단) 설문조사
- ❖ 2021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
- ✓ 2050 탄소중립위원회(202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부록에 청년이 제안하는 2040 기후중립 시나리오 수록

설문 개요

- 일시 : 8.7(1차), 8.28(2차), 9.10(3차), 9.11~12(4차)
 - 1차 : 2021년 8월 7일(탄소중립 시민회의 참여시민단 출범식)
 - 2차 : 2021년 8월 28일(시민탄소교실 전)
 - 3차 : 2021년 9월 10일(시민탄소교실 이후)
 - 4차 : 2021년 9월 11일/12일(시민대토론회 이후)
- 대상 : 참여시민단 533명(1차), 528명(2차), 504명(3차), 474(4차-1일), 459(4차-2일)
- 주요내용 : 탄소중립(정보, 정책 등)에 대한 인식/지식, 속의과정 만족도 등

국내 에너지·기후 공론화 및 기후시민의회의 흐름과 사례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 국민정책참여단
- 2019년, 1차 국민정책제안(계절관리제)
- 2020년, 2차 국민정책제안(중장기 대책)



제2차 국민정책제안(중장기 대책) 8대 대표과제

부 문	제안 내용
비전·전략	2030 미세먼지 감축목표 설정 ① 2030년 초미세먼지 관리 목표를 15 $\mu\text{g}/\text{m}^3$ 로 설정 ② 배출량과 농도 저감을 넘어 유해성-노출 농도-취약성을 고려한 유해성 관리 강화 ③ 대기오염개선 정도, 저감기술 발전, 유해성 규명 등을 반영하여 환경기준을 주기적 검토·개선
	지속가능발전-녹색성장-기후변화를 아우르는 국가비전 마련 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비전으로 선언 (3대 실천전략 : 지속가능발전목표 내재화, 녹색경제·사회 전환, 2050 탄소중립 실현) ②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현행 법률체계를 개편 및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포함한 4개 위원회를 통·폐합 등 재정비
수송	자동차 연료가격 조정(경유, 휘발유) ① 휘발유·경유 간 상대가격을 OECD 평균(100:95) 내지 권고(100:100) 수준으로 점진적 조정 ② 상대가격 조정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소통 강화, 친환경차 구매지원 확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영세 사업자 지원책 마련, 에너지 관련 세금제도 및 유가보조금 중장기 개선 등의 보완방안을 마련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 마련 ①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지만 국내 신차 판매 ② 친환경차 전환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친환경차 기술 개발, 내연기관차 산업계·종사자 보호, 영세 화물차 사업자 지원 강화, 내연기관차 판매 예외 허용 등의 보완방안 마련
발전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 ①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0(Zero)으로 감축. 다만,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하여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바람직 ②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전원믹스를 구성 ③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정적 전력 공급, 사회적 합의,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방지, 석탄발전사·근로자 및 지역 경제 피해 지원 등을 고려
	환경비용 및 연료비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칙 확립 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50% 이상 반영 ② 연료비 변동으로 인한 전력 생산 원가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 ③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정보의 투명성 강화, 환경비용 산출 및 연료비 연계방안에 대한 합리적 설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
기후·대기	미세먼지-기후변화 연계 다자제도(협약) 구축 ① 동북아 지역 국가 간 공동선언문, 양해각서, 협약 체결을 단계적으로 추진 ② '푸른 하늘의 날'을 계기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모범사례 공유 파트너십(BPSP) 추진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통합연구기관(Think-tank) 설치 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대기 연구 전담기구와 미세먼지 연구 허브 역할 수행 ② 기후·대기 분야 종합연구, 정책지원, 국제협력 및 대응 지원, 정보관리 등의 업무 수행

국내 에너지·기후 공론화 및 기후시민의회의 흐름과 사례

❖ 충남 탈석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공론화의 전후 맥락과 효과

- 2016년 이전,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 보상 확대와 친환경적 개선에 초점
- 2016년, '충남 에너지 전환 집담회' 구성 및 운영(시민단체와 연구기관 참여)
- 2017년, 도민 참여 '충남 에너지 전환 비전' 수립 및 선언(2050년 탈석탄 목표)
- 2017년~, 탈석탄/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 개최(연례)
- 2018년, '언더투연합'과 '탈석탄동맹' 가입
- 2019년,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탈석탄 금고' 지정
- 2019/2020년,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발전소) 전환 타당성 연구'(1차년도)
- 2020/2021년,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발전소) 전환 타당성 연구'(2차년도)
- 2020년, '충남에너지센터' 설립 및 위탁,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설립
- 2020년, '보령 1·2호기 폐쇄에 대한 후속 대책' 발표(충청남도 및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조기 폐쇄)
- 2021년~,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제정
- 2023년,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 석탄화력발전 지역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대화 결과를 통한 제언 및 과제
- 최근, 지역 거버넌스, '탈석탄법' 입법, 정부 지원 대책, 발전공기업 대응 방안 등 둘러싼 갈등 지속
- 반면, 충남 시군 해상 풍력 & 탈석탄 연계 정의로운 전환 및 '공공재생에너지' 대안 제기(시민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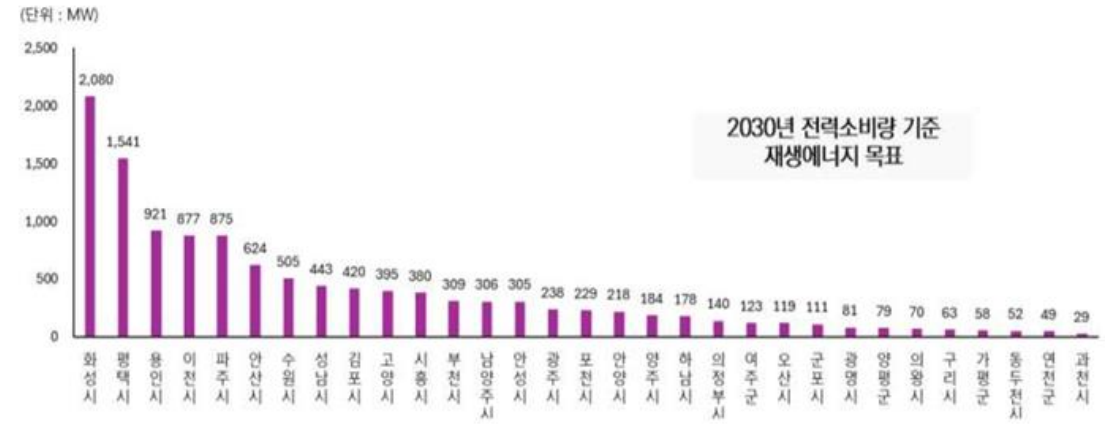


국내 에너지·기후 공론화 및 기후시민의회의 흐름과 사례

❖ 경기기후도민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전후 맥락과 효과

- 2019년,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도민 추진단 참여
- 2021~2022년,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 및 시·군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시민안) 주민발안 등(실패)
-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탄소중립추진단 조항 포함)
- 2022년~,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 및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연간)
- 2023년, 경기도 도정정책 속의공론조사: 경기RE100을 위한 도민 참여와 과제
- 2023~2024년, 경기기후도민회의 속의공론(제1차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2024년,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 출범

- 1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검토의견서
- 2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추가사업 제안서
- 3 경기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안
- 4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1개 시군 재생에너지 협력(배분) 방안
- 5 경기기후헌장(안)
- 6 N개의 도민실천방안(경기도민실천방안 158+)
- 7 청년의 제안(경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청년의 제안)



감사합니다

장석준 (전, 전의정책연구소 소장)

1. 두 발제문의 진단과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발표자들의 지적처럼, 현재 정체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돌파구를 내기 위해 보다 주의 깊으면서도 과감한 기후정치가 필요하다. 김현우 소장은 구체적인 대안의 방향을 “기/탈/존/내”라 요약하여 제시하는데, 그 각각의 내용에도 이견이 없다.

2. 다만 “기탈존내”의 마지막 항목인 “내각제 개헌”에 관해 좀 보탬 말이 있다. 대통령제에 비해 내각제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 유리하다는 진단에는 실은 더 많은 단서가 달려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유능한 면모를 보이는 정체는 내각제 일반(여기에는 영국, 일본, 인도 등도 포함될 것이기에)이라기보다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전제하는 북유럽형 내각제다. 따라서 “내각제 개헌”이라고만 이야기해서는 심각한 메시지의 오인,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항상 “완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 내각제 개헌”이라는 패키지로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실은 단순한 “내각제 개헌” 문제만은 아니게 된다. 단순다수대표제가 아닌 완전 비례대표제로 구성되는 의회가 갖는 종별적 특징이 무엇인지,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결형 민주주의와 합의형 민주주의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쟁점들에 맞춰 정당 질서는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지 등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즉, 현행 대통령제의 개혁과 의회제 정부 성격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포괄하면서도 이로 환원되지 않는 정치 전반의 재구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3. 한국의 독특한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덕분에’(?)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나 환멸이 일정하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압도적 다수는 여전히 대통령제에 집착하고 내각제에 반감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외재적 시각에서 비판만 할 수는 없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내각제에 이토록 반감부터 보이는 압도적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결국은 동의를 이끌어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내각제 개헌”을 무매개적으로 주장한다면, 자칫 일부 급진좌파의 “생태사회주의”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보이는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 가령 현존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완전히 이행해야만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애초 의도와는 달리 급박한 기후위기 대응을 뒤로 미루는 효과를 낳는다(혹은 그런 지연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중의 실질적 호응 없이 선동 차원에서 주창되는 “내각제 개헌”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정치를 앞당기기보다는 그 지연을 방조하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 그렇다고 “내각제 개헌”을 이야기하지 말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현실에 기민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의회제 정부 성격을 도입, 강화할 구체적 전략을 고안하자는 것이다. 온전한 내각제 개헌 이전이라도 현행 헌법의 ‘해석적’ 틀 안에서 국회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국무총리직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험이 실제로 누적될 때에 아마도 내각제 개헌에 대한 동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주된 정책 목표로 삼아 국무총리나 경제 담당 부총리, 환경부장관 등을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4. 기후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전환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보다 급진적인 발상 역시 필요하다. 가령 김현우 소장이 지적하듯이 기후시민의회를 기존 대의기구의 단순한 보완재가 아니라 ‘이중권력’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다. 이것은 복합위기 대응에서 기존 대의제가 보이는 철저한 무능력에 대한 비판을 전제한다. 하나의 전국적 의회가 만사를 관장한다는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 모델은 생명을 다했다. 고전적인 의회 기구는 이제 관료기구에 맞서 국가라는 무대에 인민주권을 관철시키는 통로(그러나 결정적인 기능이지는 하다)로만 의미를 갖는다. 기후위기와 같은 낯설고 거대한 쟁점을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새로운 대의체계가 고안, 구축되어야 한다. 현대의 민주적 의회라면 이 대의 기능을 ‘기꺼이’ 별도의 새 대의기구에 이양, 분산해야 한다. 즉, 선거, 추천 등의 방식으로 구성된 기후시민의회(선거로 선출된 기구와 추천으로 선출된 기구로 이뤄진 양원제형 기후시민회의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가 상설 기구로서 기후대응계획을 입안하고, 의회는 이를 내각을 통해 집행하거나 국민투표에 붙이는 권한만을 행사해야 한다. — 인류 초유의 위기는 전혀 다른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달리 말하면, 기존 민주주의의 단절적 재구성만이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정치(기후정치 등)를 실현시킬 수 있다.

토론문

한상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대외협력부장)

성장주의에 잠식된 노동,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에 더딘 노동

-노동의 주요한 요구와 투쟁의 방향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는 연결되지 않은 고용안정, 임금인상에 방점을 찍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음. 상층의, 그것도 일부 간부와 활동가들의 고도화된 문제의식과 대다수 조합원들 사이의 괴리가 존재(이는 사회주의나 변혁이라는 쟁점을 둘러싼 전노협-민주노총의 역사와도 동일)

-민주노총이 5월에 실시한 “대전환시대 노동운동진단을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설문조사”에서 기후위기 의제는 통일/전쟁위기 의제 보다 낮고 득표가 저조했음. 최근 민주노총이 주도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의제별 선호도 조사에서도 기후위기는 선택이 저조했음. 그런데, 우리에게 티핑포인트까지 남은 시간은 과연?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지향하는 조직된 노동의 현재 모습과 상태가 성장주의에 기반한 기후침묵, 허구적 기후정치에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음

노동조합 안에서 ‘녹색 정동의 정치’

-기후위기를 나와 우리의 당면한 주요 과제로 삼고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나가야 하는 노동자=시민=기후시민으로 주체화하는 현장이자 학교로서 노동조합(민주노총)

-시야는 넓게, 실천은 나의 사업장, 내가 사는 지역부터

-그런데, 프로그램은? 조직 운영 방식은?

-고용, 임금, 노동시간과 근로조건 등의 당면 현안을 어떻게 ‘녹색화’할 것인가?

기후정치에 대한 고민1: 노동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

-탄소 배출 감축의 직간접적 과정에서 벌어지는 국가와 자본 주도의 산업전환과 구조조정을 노동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바꿔낼 필요가 있음

-그런데 자본주의, 성장주의를 블랙박스로 놓고 전환이 가능? 탈성장, 탈자본주의 나아가 [그 어떤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방향 설정 없이 ‘노동 주도의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

-경기지역의 가스발전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노동이 갈팡질팡하며 근시안적으로 시간만 보내다가 몇 년 후 국가와 자본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면?

-결국 노동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 전환하는가가 ‘정의로운 전환’의 가능성도 설정

할 것임

-노동자=시민=지역주민의 존엄과 권리가 지켜지는 전환, 노동자=시민=지역주민이 전환 과정 자체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고 그 전환의 방향과 경로 등을 결정할 수 있어야

-이를 위해, 제도를 먼저 구축? 아니면 현장과 지역에서 투쟁을 통해 쟁취/압박?

기후정치에 대한 고민2: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정치에 대한 고민3: 누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생산재, 소비재, 서비스 중 무엇을 생산하지 않고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이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누가 어느 공간적 범위 안에서 논의하고 계획하고 결정한 것인가?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 질문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모델 수립과 실험적 실천들이 필요

두 분의 발제문을 잘 읽어 봤습니다. 소위 정치운동을 접어둔지 오래되서 감각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등장하는 용어중에 생소한 개념들이 있어 공부하는 마음으로 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간 기후-에너지전환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다보니 시야가 좁아졌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데나 정의로운전환을 갖다 붙이는 현상을 종종 보게 되고, 심하게는 일자리만 바꾸면 정의로운전환이라는 인식을 접하다보니 두뇌 회로가 꼬이고 어디서부터 정신줄을 잡아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 두 분의 문제의식과 시선은 어지러움을 툭툭 건드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김현우 소장의 발표문 중 “결국 성장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 발전 정책과 제도, 그리고 정치인과 시민들에게까지 뿌리내린 성장 강박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후정치는 원칙과 이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현실 진단에 매우 공감합니다. “경제성장의 정언명령이 지배하는 사회”, 그 명령같은 인식의 심연이 어느 깊이인지 감히 상상조차 힘든 사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탈성장을 위한 전략적 캔버스”에서 「공생적 변혁모드」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의 지역 돌봄’와 ‘지역의 노동 돌봄’으로 ‘정동정치’의 싹이 생겨난다면 「틈새적 변혁모드」가 작동할 수 있는 내적 힘이 마련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안하신 “기탈존내(기후위기, 탈성장, 존재 다양성, 내각제 개헌)”라는 키워드가 ‘좋은 정치’와 ‘다른 정치’의 작동 기제로 작용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탈성장 키워드를 빼면 민주당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 민주당 중심의 양당정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론과 비판에서 몇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양당정치에 짓눌린 중앙과 지역 정치를 급진화하고 풍부화하는 것, 녹색정동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와 실험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한 나아갈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당을 다시 만들자는 논의로 귀결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형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운동 상당수가 권력과 가까이 있어 내부에서 급진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 고리타분한 정파주의가 여전한 노동운동의 현실, 무엇보다 탈성장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생산감축-이윤축소-소득감소라는 물리적 법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심스런 상황은 녹색정동 실험에 도움이 안되리라 보여집니다.

두분의 글을 읽고 머리로나마 녹색정동을 그려봅니다.

RE100을 달성해야하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공장엔 노동조합도 있고 노동활동가도 있습니다. 노동활동가 중에는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받는 녹색활동가가 있고, 그 녹색활동가는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운동과 생태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내부논의와 동의를 얻어 조합원들과 조합원 가족이 참여하는 녹색소비자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간의 노력으로 회사식당의 식자재는 지역내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농산물로 공급되며 서로에게 수익성이 맞춰졌습니다. 이를 경험한 노동조합은 새로운 노동자모임을 추진해봅니다. 조합원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안내하며 관심있는 조합원을 조직하고, 회사측에게는 공장 지붕과 주차장을 제공하라고 요청하고 협약을 맺고, 태양광발전소를 세웁니다. SMP는 회사 전기세로 내고, REC는 조합원에게 배당됩니다. 손해가 없으니 노사협약을 확대해 2공장, 3공장에도 태양광발전, 풍력 발전을 추진합니다. 그러다보니 이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필요해져 퇴직이 예정된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전문기술훈련을 받게하여 자연스런 노동전환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전파되어 주변의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자극을 줍니다.

정의로운전환 정책사업을 고민하던 지자체는 녹색 에너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이같은 노동자 집단(노동조합과 협동조합)에게 또다른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지역내 공공부지를 제공하여 녹색 일자리 또는 정의로운전환 실현지로 만들어보자는 대안을 던집니다. 이 발전사업은 회사-노동조합-시민사회-지자체가 합을 맞춰야 실현되므로 새로운 형태의 계약형태(일종의 사회계약)이 요구되어 집니다. 녹색전환에 동의하는 노동자집단의 참여율, 노동자가 참여하는 발전사업에 동의하는 시민 참여율, 시민참여 발전사업에 동의하는 노동자 참여율, 참여 비중에 맞는 수익 배분률 등이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000 사회적협약! 이 협약을 맺은 회사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협동조합 등)에게만 정책자금이 지원됩니다. 말 그대로 초보적 그림이지만 노동의 지역 돌봄, 지역의 노동 돌봄을 그려봤고, 녹색정동의 진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